연구자료 18-0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신꽃비·나수엽·박민숙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 구 자 료
18-03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신꽃비 · 나수엽 · 박민숙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18-03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인 쇄 2018년 8월 14일
발 행 2018년 8월 2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8, 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북마을 T. 042-632-3134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51-0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상위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 반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자본재 교역에서의 흑자가 소비재 교역에서의 흑자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미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위기술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중·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에서의 무역불균형을 완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 · 미 간 통상 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방법론과 분석기간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율 관련 압박 외에도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 · 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 · 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 · 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 · 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 조정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

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 · 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 · 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3
2. 선행연구 검토 ····· 15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8

제2장 중 · 미 간 경상수지 현황 ····· **19**

1. 개관 ····· 19
2. 상품교역 현황 ····· 21
   가. 중 · 미 간 상품 교역 ····· 21
   나. 중 · 미 간 교역구조 분석 ····· 27
3. 서비스 교역 현황 ····· 35
   가. 중 · 미 간 서비스 교역 ····· 35
   나. 중 · 미 간 서비스 수지 ····· 36
4. 소결 ····· 38

제3장 중 · 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 **40**

1. 통상분쟁의 배경 ····· 40
   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 40
   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및 규제조치 강화 ····· 41
2.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 ····· 43
   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 43
   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논의 ····· 45
   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 48

3. 미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 ····· 51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 51
나. 201조 ····· 53
다. 232조 ····· 55
라. 301조 ····· 57
마. 미국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조치 ····· 59
4. 평가 및 향후 전망 ····· 63
가. 평가 ····· 63
나. 향후 전망 ····· 65

제4장 중 · 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68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 70
가. 분석모형 설정 ····· 70
나. 실증분석 결과 ····· 74
2.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환율의 관계 ····· 77
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persistence) 추정 ····· 78
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과 환율제도의 관계 ····· 79
3. 소결 ····· 8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83

1. 요약 ····· 83
2. 정책적 시사점 ····· 85
가. 전망 및 협력방향 ····· 85
나. 중 · 미 통상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87

참고문헌 ····· 90

Executive Summary ····· 97

표 차례

표 2-1. 미국의 상위 10대 적자국(2017년) ····· 25
표 2-2.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상위 10대 품목 ····· 26
표 2-3. UN 제품용도별 수출입품목 분류(BEC)기준 ····· 29
표 2-4. 미국의 업종별 대중 서비스 수지 ····· 37
표 3-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4대 최우선 과제 ····· 42
표 3-2. 위안화의 저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 46
표 3-3.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 (2017. 1~12) ····· 50
표 3-4.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 (2018. 3. 12. 기준) ····· 52
표 3-5. 232조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 56
표 3-6. 301조 조사 경과 ····· 58
표 3-7.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별 중국정부의 반응 ····· 60
표 3-8. 미국 대중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보복) 조치 ····· 62
표 3-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슈별 통상분쟁 ····· 64
표 3-10. 중 · 미 통상분쟁 시나리오 ····· 67
표 4-1. 변수의 출처와 설명 ····· 72
표 4-2. 단위근 검정 결과 ····· 73
표 4-3.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 ····· 73
표 4-4.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 75
표 4-5. 분산분해 결과 ····· 77
표 4-6. 경상수지 지속성 변동요인 분석 결과 ····· 81
표 5-1.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평가 ····· 88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경상수지 추이 ····· 19
그림 2-2. 중국 경상수지의 구성항목별 변화 추이 ····· 20
그림 2-3.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 ····· 21
그림 2-4.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 22
그림 2-5. 중국의 무역흑자 추이 ····· 22
그림 2-6.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 23
그림 2-7. 중 · 미 간 상품수지 ····· 24
그림 2-8. 중국의 주요 흑자국 ····· 24
그림 2-9. 중국의 대미 수출(가공단계별) ····· 30
그림 2-10. 중국의 대미 수입(가공단계별) ····· 31
그림 2-11. 중국의 대미 수지(가공단계별) ····· 31
그림 2-12. 중국의 대미 수지 비중(가공단계별) ····· 32
그림 2-13.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출 ····· 33
그림 2-14.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입 ····· 33
그림 2-15.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지 추이 ····· 34
그림 2-16.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지 ····· 36
그림 3-1.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 ····· 45
그림 3-2.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추이 ····· 51
그림 4-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와 실질환율 ····· 69
그림 4-2. 시변파라미터 추정치 ····· 79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41
글상자 3-2. 1974년 통상법 201조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 54
글상자 3-3.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 개요 ····· 56
글상자 3-4.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 57
글상자 3-5. USTR의 대중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 5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대 들어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과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이자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교역의 감소, 양적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간의 불균형[1]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양국간의 불균형(bilateral imbalance)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대외적 불균형은 대내적 불균형을 투영한다는 관점에 의하면 미국의 과잉소비와 재정적자, 중국의 과잉저축(saving glut)[2]이 무역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감축과 재정 불균형의 해소, 중국의 소비 ·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 전환,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실현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양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역불균형은 양국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제수지 발전단계 이론[3]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발전과 비교우위산업의 성장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를

1) 양국간 경상수지 총액 기준.
2) Cooper(2006); Bernanke(2005).
3) Kindleberger(1958)의 국제수지 발전단계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성숙채무국, 성숙채무국, 미성숙채권국, 성숙채권국 등 크게 4단계로 순환하며 경상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을 경험하게 됨.

시현하는 미성숙채권국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혹은 달러화의 고평가로 인해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가 시장 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과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달러화의 가치가 높게 유지되는 측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경제성장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4]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오랜 무역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 내 정치·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상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자체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환율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평가절상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위안화의 저평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관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국간 통상분쟁은 관세부과조치를 중심으로 국지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 상무부는 즉각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5] 이에 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와 보복관세 부과 조치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롯한 거시적인 마찰 요인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며 여전히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있다.

---

4) 2017년 4월 7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한 '100일 계획'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7월 19일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KIEP 북경사무소(2017), pp. 14~17.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룸.

이에 본 연구는 교역구조를 중심으로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 · 미 간 통상분쟁 및 경상수지 불균형과 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대한 방대한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Debelle and Faruqee(1996)와 Chinn and Prasad(2003) 등이 있다. Debelle and Faruqee(1996)는 1971~93년까지 21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오차수정 모형을 준용하여 경상수지 적자에 영향을 주는 장 · 단기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단기적인 경상수지 변동은 재정수지, 실질환율, 경기순환, 교역조건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 소득 수준, 인구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Chinn and Prasad(2003)는 89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중 · 장기적으로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국민계정항등식에 의하면 경상수지는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득 수준, 재정수지, 인구구조, 금융심화와 같이 총저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경상수지의 중 · 장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정수지와 순 해외자산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금융심화는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고 개방도의 증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Trehan and Walsh(1991)에서는 장기예산제약식

(long-run budget constraints)을 이용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안정적 시계열이어야 함을 보였다. 이후 Christopoulos and León-Ledesma(2010), Baharumshah, Lau, and Fountas(2003), Chen(2011) 등의 연구에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방법론을 이용하여 여러 국가들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는 경상수지의 조정과 환율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Clower and Ito(2012)는 7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상수지 지속성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 시점을 식별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면(non-stationary regime)이 일어날 확률이 환율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샘플에서는 환율제도가 경상수지의 지속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를 취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면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n and Wei(2013) 역시 환율제도가 경상수지의 조정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1971~2005년 동안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유연한 환율제도가 경상수지의 조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일관적인 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중 · 미 간 무역불균형과 환율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진빈, 이기성(2017)과 윤여준 외(2017)가 대표적이다. 진빈, 이기성(2017)은 1994년 1/4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GDP와 실질환율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 장 · 단기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구조적 충격을 식별한 결과, 실질환율의 상승(위안화의 절하)은 대미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준 외(2017)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제재조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VAR 모형을 통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

안화의 달러 대비 절상 충격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중국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 조정이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杨珺晖(2016)는 위안화가 대폭 절상된 시기에도 중·미 간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비환율적 요인인 양국간 교역구조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의 내수용 제품(가전기기 설비, 방직원료, 생활필수 소비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 소비재(생활필수품)와 자본재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의 산업구조(1차 산업 1.2%, 2차 산업 19.6%, 3차 산업 79.2%, 2010년 기준) 때문으로 설명했다.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중국의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미국의 '소비 위주의 수입'의 결과로, 이런 국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가장 최근의 문헌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미 간 통상이슈를 분석한 후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베이징 현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앞서 소개한 경상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국가 패널을 이용하여 한 국가의 총 경상수지(overall current account)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미 양국간의 경상수지(bilateral current account)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총 경상수지 불균형에 있어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선행연구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 양국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 검토와 통계 분석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현지 조사를 통한 전문가 면담도 추가하였다. 실증분석 부분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에 있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환율의 장 ·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변파라미터 모형(Time-varying Parameter Model)을 활용하여 양국간 경상수지 지속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추정된 지속성의 변화가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는 모형과 변수의 선택 등에 따라 강건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교역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위주로 양국간 무역수지를 비교하고, 주요 흑자품목과 적자품목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교역품을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하여 교역구조의 특징을 파악한 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모색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이슈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통상분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환율보고서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치, 미통상법 201조 · 232조 · 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 4장에서는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율이 장 ·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지 분석하고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양국의 경상수지 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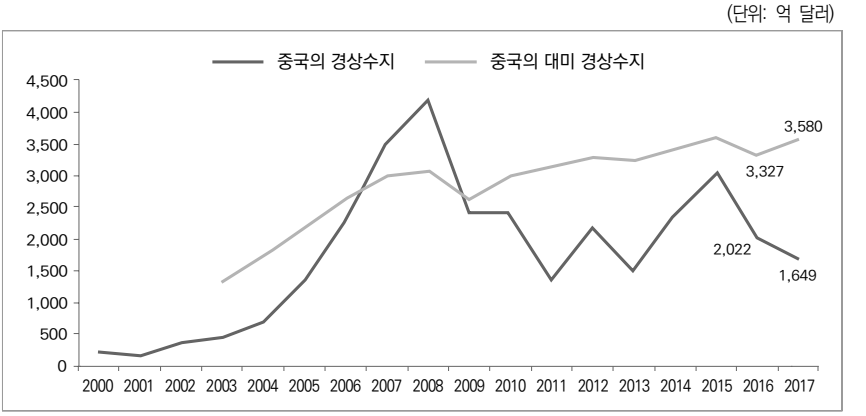
제2장 중 · 미 간 경상수지 현황

1. 개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상흑자와 미국의 경상적자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 · 미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위안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재무부가 발행하는 '환율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5회 연속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해 경상수지를 조정하고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6)]

그림 2-1. 중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8. 4.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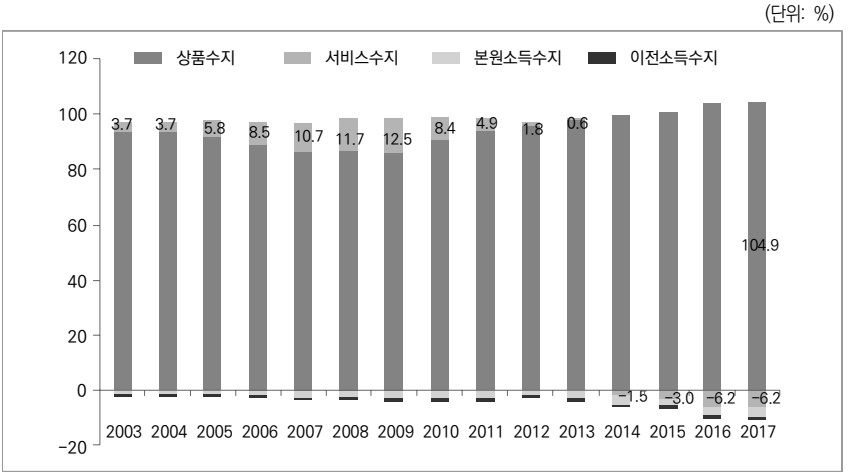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그동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GDP 대비 9.2%까지 확대되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GDP 대비 1.4%로 감소하였다.[7] 반면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580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하면서 중 · 미 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장에서 중 · 미 간 경상수지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경상수지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는 통상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경상수지 규모는 대부분 상품 및 서비스 수지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98.7%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 · 미 간 상품 및 서비스 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2-2. 중국 경상수지의 구성항목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18. 4.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s Country Outlook Economic Monthly Forecast Update Tables_China, https://connect.ihs.com/Dashboard/IndexWithoutDefaultTaxonomies?mode=LastTextNavigation(검색일: 2018. 4. 25).

2. 상품교역 현황

가. 중 · 미 간 상품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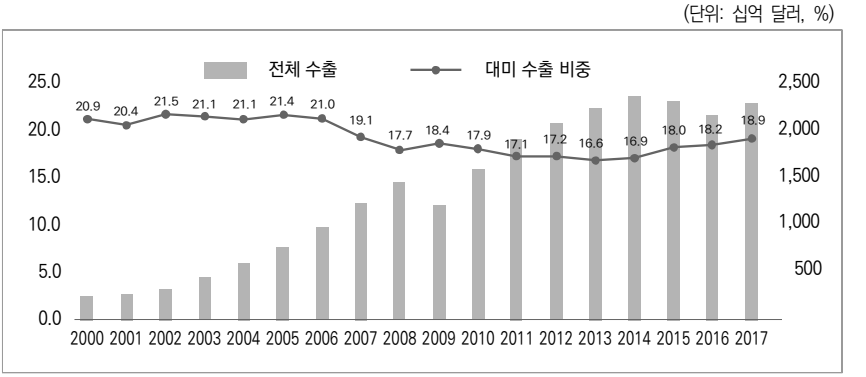
1) 중 · 미 간 교역 의존도

중 · 미 양국은 상호 주요 교역국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3대 수입국이며,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중국 또한 미국의 제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은 평균 11% 증가(동 기간 미국의 대세계 수출은 4% 증가)하여, 동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평균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양국간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로 2000년(20.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로 2000년(2.1%)에 비해 6.3%p 증가하였다(그림 2-3, 그림 2-4 참고).

그림 2-3.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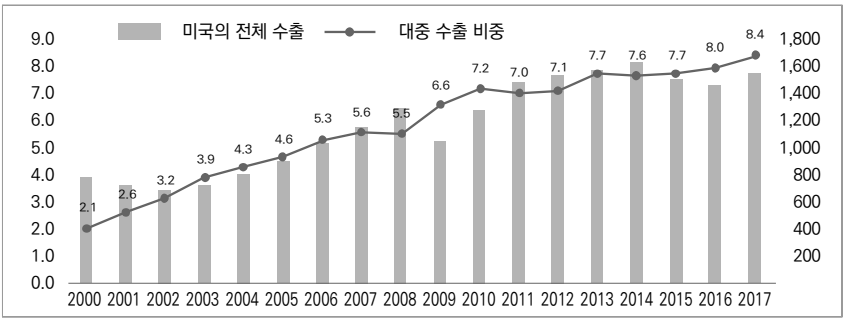


자료: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5. 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8) 中国商务部(2017), p. 22.

그림 2-4.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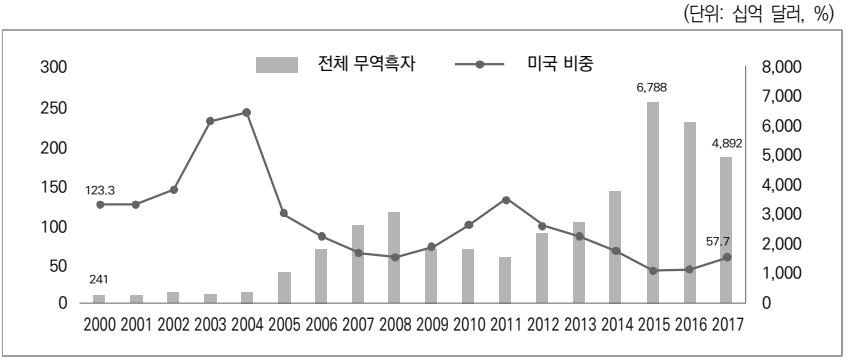
자료: KITA, 미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중 · 미 간 상품수지

중국의 무역흑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최고치(6,788억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에는 수입증가율(17.5%)이 수출증가율(6.8%)을 크게 상회하면서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그림 2-5 참고). 그러나 중 · 미 간 교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가 증가할수록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5. 중국의 무역흑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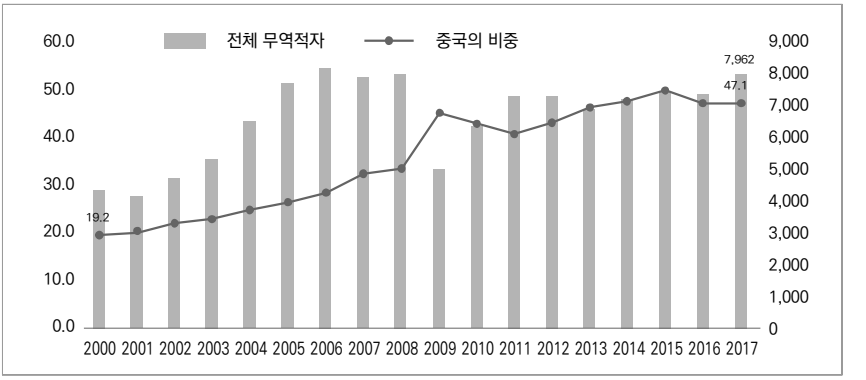


자료: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0년 838억 달러에서 2017년 3,75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의 비중도 19.2%에서 47.1%로 확대되었다(그림 2-6 참고). 한편 중·미 간 상품무역에 있어 무역불균형을 설명하는 중국의 대미 흑자인 동시에 미국의 대중 적자의 통계수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7 참고). 이는 양국간 무역 집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동안 중·미 양국은 통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수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무역통계 오차를 수정하고 있다.[9)]

그림 2-6. 미국의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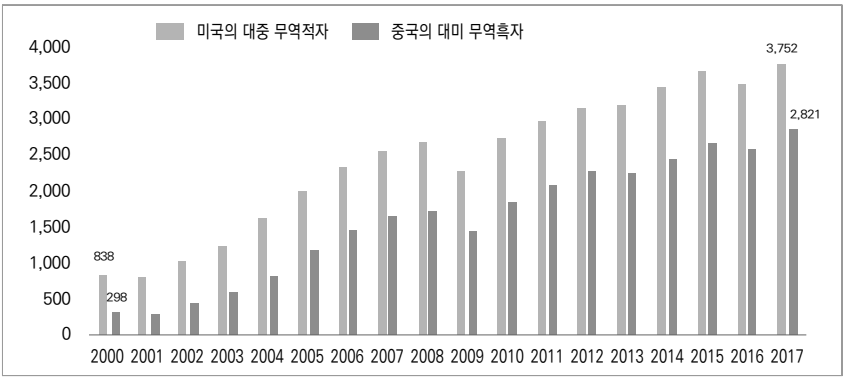


자료: KITA, 미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9) 대표적으로 중국은 수출금액 집계 시 본선인도방식(FOB)을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선측인도방식(FAS)으로 한다. 수입의 경우도 중국은 도착항인도가격방식(CIF)으로 집계하고, 미국은 선측인도방식과 도착항인도방식(FAS+CIF)으로 한다. 또한 재수출과 재수입에 있어서도 상이한데, 중국의 경우 재수출의 일부를 수출에 포함하지만 미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재수입의 경우 중국은 모두 포함하지만 미국은 일부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중·미상품무역통계 차이 연구보고(中美货物贸易统计差异研究报告)』, http://www.mofcom.gov.cn/aarticle/i/dxfw/nbgz/201003/20100306806806.html(검색일: 2018. 5. 9).

그림 2-7. 중 · 미 간 상품수지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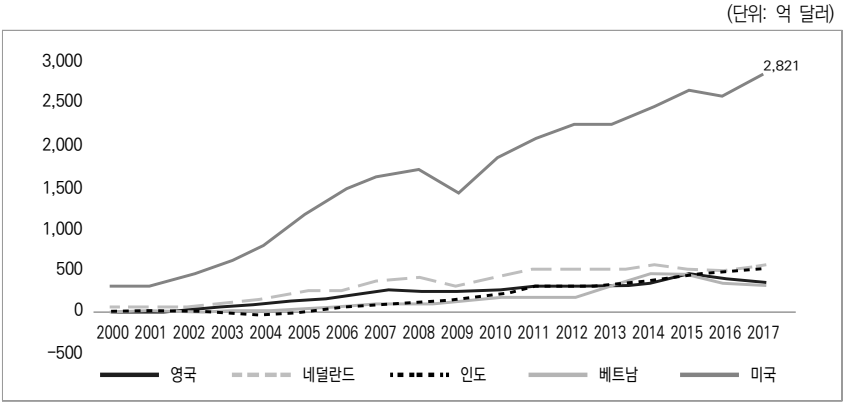


자료: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 KITA, 미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중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흑자 규모는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제1흑자국인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흑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8 참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 적자국인 중국과의 적자 규모가 2위인 멕시코(711억 달러) 및 3위인 일본(688억 달러)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크다(표 2-1 참고).

그림 2-8. 중국의 주요 흑자국

(단위: 억 달러)



자료: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 미국의 상위 10대 적자국(2017년)

(단위: 억 달러)

순위	국별	수출	수입	수지
1위	중국	1,304	5,056	-3,752
2위	멕시코	2,430	3,140	-711
3위	일본	677	1,365	-688
4위	독일	535	1,177	-643
5위	베트남	82	465	-383
6위	아일랜드	107	488	-381
7위	이탈리아	183	500	-316
8위	말레이시아	128	374	-246
9위	인도	257	486	-229
10위	한국	483	712	-229

자료: KITA, 미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18)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을 살펴보면 전화기 및 무선 통신류(462억 달러, 10.7%), 자동 자료 처리 기계류(445억 달러, 10.3%),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류(103억 달러, 2.4%) 등을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전자기계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대미 수입품은 항공기(142억 달러, 9.5%), 대두(140억 달러, 9.3%), 자동차(128억 달러, 8.5%)이며, 이 교역품(항공기, 대두, 자동차)의 대미 수입의존도는 27.3%에 달한다.[10] 中国商务部(2017)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와 대두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자동차, 집적회로의 제2 수출시장이다. 2016년 기준 미국은 항공기 총 440대(125억 달러),[11] 대두 3,366만 톤(138억 달러), 자동차 25만 5,000대(121억 달러), 집적회로 97억 달러, 면화 26만 톤(5억 달러)을 중국에 수출하였다.[12]

양국간 교역에서 중국은 전화기 및 기타 무선통신류 품목에서 455억 달러

10)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4).
11) 2016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판매 중 약 25%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 中国商务部(2017), p. 22.

(16.1%)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흑자 품목인 전자기기류, 가구류의 경우 중국이 꾸준히 흑자를 기록(미국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이다. 2017년 기준 상위 10대 흑자 품목의 규모는 중국 전체 무역 흑자의 1/2 이상을 차지(55.5%)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미 무역적자는 대두(140억 달러) 교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항공 관련 품목, 자동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2 참고). 대두는 2014년까지 최대 대미 수입품이었으며, 미국이 장기간 무역흑자(중국의 대미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표 2-2.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상위 10대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코드	품목명	흑자액	코드	품목명	적자액
1	8517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송수신 기기류	455	1201	대두	140
2	8471	자동자료 처리기계류	438	8802	기타 항공기(헬리콥터) 우주선(인공위성 포함)	135
3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류	104	8703	자동차	111
4	9403	기타 가구와 부분품류	98	8542	전자집적회로	92
5	8473	타자기 등 사무용기계 부분품	91	2709	석유, 역청류(원유)	30
6	9401	의자류 (차량용 및 항공용 등)	86	8411	터보제트, 가스터빈 (선박, 항공 포함)	29
7	8708	트랙터 및 특수용 차량 부분품	83	4707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	27
8	9405	램프, 조명기구 및 그 부분품	78	2711	석유가스	25
9	9503	어린용 탈 것 및 기타 완구	71	8486	반도체	24
10	4202	트렁크 등 가죽용기	61	3002	치료 및 예방용 의료조제품	20

자료: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 · 미 간 교역구조 분석

1) 가공단계별 교역

중국은 대외개방 초기부터 가공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허용하고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외자기업의 유치를 도모해왔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외자기업 중심의 가공무역 형태로 발전했으며, 중 · 미 간 교역 역시 가공무역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관련 제품의 리스트(허용, 제한, 금지)를 마련[13]하고, 홍색 공급망[14]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가공무역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0년 전체 수출에서 46.9%(7,407억 달러)에 달하던 가공무역 비중이 2017년 33.0%(7,604억 달러)로 감소하고, 동 기간 수입 비중 역시 30%에서 23.5%로 감소하였다.[15]

본 절에서 중 · 미 간 무역구조를 가공단계별로 분석하는 이유는 중 · 미 간 무역흑자 역시 이러한 무역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구조가 중국 전체 수출금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중 · 미 간 무역흑자를 확대시켰다. 中国商务部(2017)는 중국 상품의 무역 흑자 중 59%가 외자기업에서 발생했으며, 61%가 가공무역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16] 2017년 10월 기준 중국 내 외자기업 비중은 42.9%로 2000년(54.6%)에 비해 11.7%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17] 이처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외자기업들이 주도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인해 과대

13) 1999년 가공무역 관련 리스트를 마련한 후, 2004년 처음으로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341개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지품목을 확대하였음. 2017년 기준 1,862개를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14) 중국이 그동안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입대체화 전략'으로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 자국 내 벨류체인을 급속히 확대해나가고 있음.

15) CEIC(검색일: 2018. 2. 19).

16) 中国商务部(2017), p. 44.

17) 최근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인건비 및 제조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이탈하면서 비중이 감소했지만, 외자기업 비중(42.9%)은 여전히 높다. 「中国对外贸易形势报告」, 2017年 秋季, http://zhs.mofcom.gov.cn/article/cbw/201711/20171102666142.shtml(검색일: 2018. 4. 24).

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윤여준 외(2017)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이 글로벌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이 자국(미국)으로 들여오는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도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葛明, 林玲, 赵素萍(2015)는 중국 주요 수출산업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주요 흑자국인 미국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표적인 대미 흑자산업인 전자와 광학설비 등에서 국외 부가가치율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Mathai *et al.*(2016) 역시 중국의 현행 무역 집계 방식과 OECD의 부가가치 무역방식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대중 적자가 약 35% 과대평가[18]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中国商务部(2017)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인 의류[19]와 소형가전 제품 등에서 대부분 가공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소형가전 생산능력은 글로벌 생산능력의 80% 이상이며, 전 세계 수출에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6년 기준, 총 342억 달러). 하지만 중국기업의 생산방식은 대부분 OEM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수출가격이 최종시장 소매가의 1/4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더 낮게 책정된다.[20] 때문에 중 · 미 간 교역구조를 가공단계별로 분석하여 양국 공급방식(벨류체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 · 미 간 무역흑자의 확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

중 · 미 간 가공단계별 무역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공단계는 크게 1차 산품, 중간재(반제품과 부품 ·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어진다(표 2-3 참고).

---

18) Mathai *et al.*(2016), p.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Departmental-Papers-Policy-Papers/Issues/2016/12/31/China-s-Changing-Trade-and-the-Implications-for-the-CLMV-43679(검색일: 2018. 4. 24).

19) Mathai *et al.*(2016), p.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Departmental-Papers-Policy-Papers/Issues/2016/12/31/China-s-Changing-Trade-and-the-Implications-for-the-CLMV-43679(검색일: 2018. 4. 24).

20) 中国商务部(2017), p. 24.

표 2-3. UN 제품용도별 수출입품목 분류(BEC)기준

3단계	5단계	BEC코드	BEC제품명
1차 산품		111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21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31	원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 및 부분품	42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53	운송장비의 것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3	비내구성 소비재

자료: 정환우(2017), p. 40.

중국의 대미 수출(미국의 대중 수입)을 살펴보면, 중국 내 가공생산품의 최종 소비지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은 자본재(39.0%), 소비재(29.5%), 반제품(17.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최종재(자본재+소비재)가 6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9 참고). 이는 중국의 주요 대미 자본재 수출 품목인 음성 및 영상 송수신기기(HS8517, 10.7%), 자동자료처리기기(HS8471, 10.3%), 텔레비전 수신기기(HS8528, 2.4%)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21] OECD TIVA 통계(2011년)에 따르면, 대미 수출에서 중국 내 부가가치율은 60%에 불과하며, 주요 대미 수출품인 전자기기류의 중국 내 부가가치율은 45%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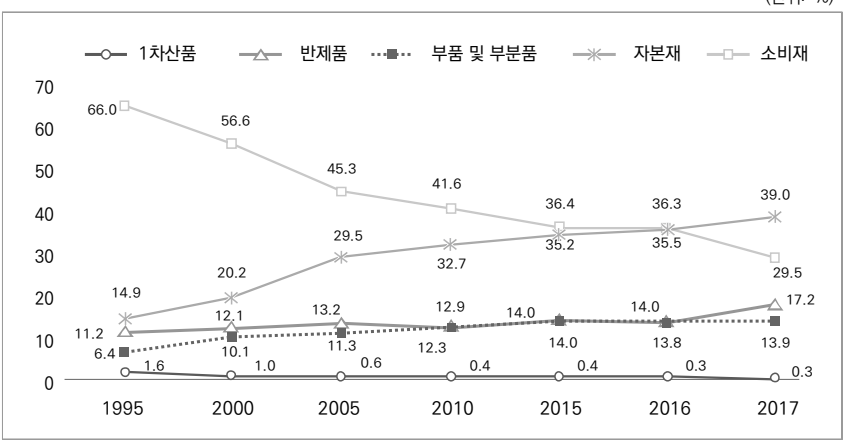
21) KITA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5. 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대미 수출을 추세적으로 보면 소비재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자본재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최종재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간재(반제품+부분품)의 경우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그림 2-9 참고).

한편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입 가공단계별 비중은 반제품(31.2%), 1차 산품(26.9%), 소비재(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10 참고). 반제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요 대미 수입품인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22)의 비중(28.4%)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판지(HS4707, 1.8%), 목재(HS4407, 1.1%), 동 웨이스트(HS7404, 0.9%), 면(HS5201, 0.7%), 플라스틱(HS3901, 0.7%), 원피 및 가죽(HS4101, 0.6%), 알루미늄 웨이스트(HS7602, 0.6%) 등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22] 반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단순가공이나 조립이 필요한 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2-9. 중국의 대미 수출(가공단계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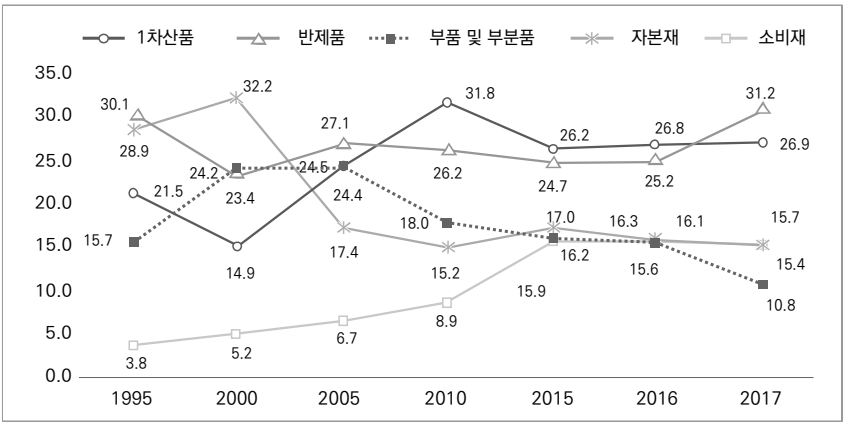


주: 2017년 수치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수입통계를 활용.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2) KITA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5.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0. 중국의 대미 수입(가공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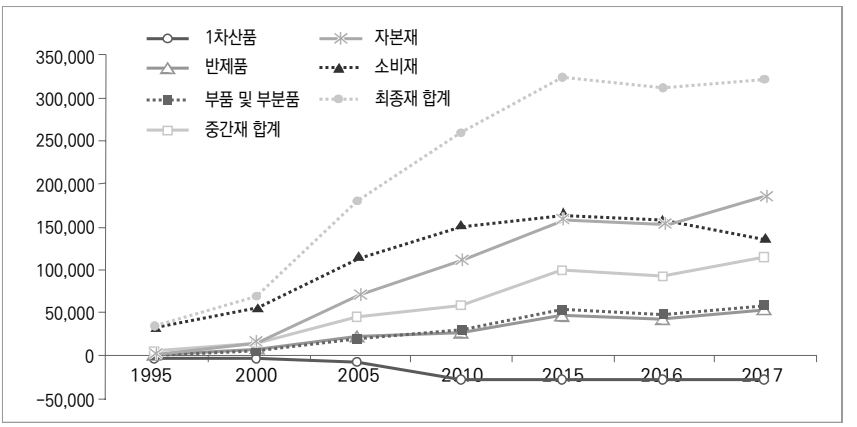
(단위 %)



주: 2017년 수치를 이용을 위해 미국의 대중 수입통계를 활용.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1. 중국의 대미 수지(가공단계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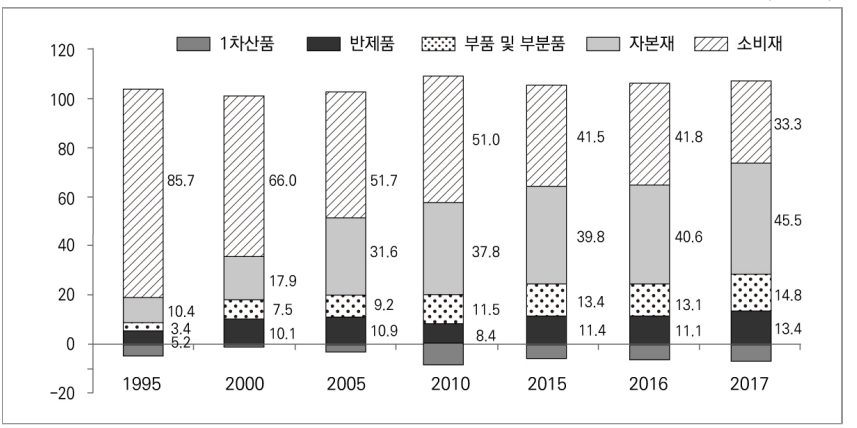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78.8%)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 자본재[23]의 흑자 규모는 1,852억 달러로 전년대비 21.3% 증가하여 가장 높은

흑자율(45.5%)을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항상 대미 흑자를 기록해온 소비재는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재(28.2%)에서 흑자가 소폭 증가했다[24](그림 2-11 참고).

그림 2-12. 중국의 대미 수지 비중(가공단계별)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기술수준별 교역

중국의 교역구조를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최근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현태 외(2017)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제조업 수출에서 고위기술의 비중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고위기술(26.7%), 저위기술(27.9%) 순으로 나타났다.[25]

중·미 간 교역구조 역시 노동집약형 저기술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형 상

23) 자본재는 BEC 41(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BEC 521 (산업용 운송장비)로 분류되며, 생산기계나 원자재 따위의 생산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 HS 코드상 전자기기 및 부품, 철도와 선박 및 관련 부분품을 포함하고 있음.

24) 중간재의 경우 2016년 911억 8,300만 달러에서 2017년 1,145억 5,500만 달러를 기록, 2016년 대비 25.63% 증가했다.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

25) 이현태 외(2017), p. 110 참고.

품구조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중국의 대미 첨단기술 산업(HT)의 수출 비중은 23.3%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6년 38.6%에 달했다. 반면 동 기간 노동집약형 저기술산업(LT)의 수출 비중은 51.3%에서 35.7%로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대미 수입의 경우 중위기술(MT) 비중의 증가세가 크게 두드러졌으며, 고부가가치 산업(HT)의 비중은 2007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4 참고).

그림 2-13.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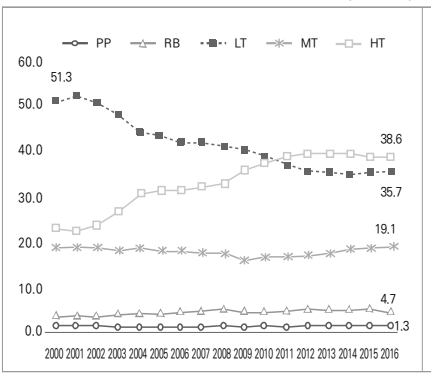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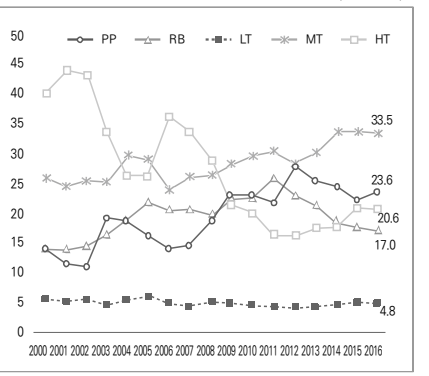


그림 2-14.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입

(단위: %)



주: 1) 기술수준 분류는 SITC rev.3 products, by technological categories(Lall 2000) 참고.
2) PP(농산물), RB(농업기반 제조업), LT(저위기술 제조업),MT(중위기술 제조업), HT(고위기술 제조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2. 2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양국간 기술수준별 교역의 특징은 무역 형태, 중국 내 산업발전 정책,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간 무역은 중국이 미국의 일부 생산 공정을 하청 받아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한 재화를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자본기술집약적인 재화의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이 국내에서 이를 가공 조립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면, 이 상품은 중국의 (자본기술집약적인)재화로 분류[26]된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은 글로벌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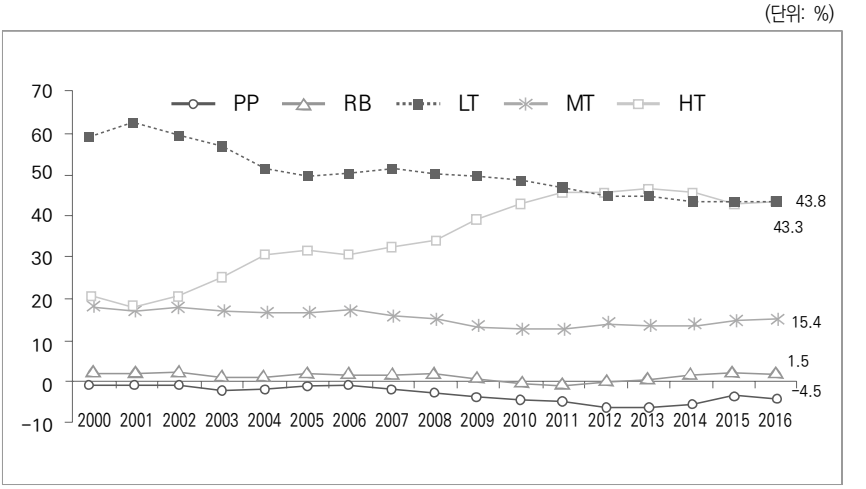
26) 나까가네 카츠지 저, 강희정, 강정구 역(2016), p. 140.

산네트워크와 상이한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생산, 기술연구,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고리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하지만 수출되는 실제 제품과 중국이 담당하는 공정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최종조립단계 공정이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종조립단계의 공정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고 중간 정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한다.[27]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의 대중 기술수준별 교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중위기술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다른 요인으로는 중국 내 산업 발전정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조업의 효율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28] 한편 효율이 낮은 과잉생산 시설을 도태시키는 등 산업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발전 정책 시행 결과 중국의 고부가가치형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5. 중국의 기술수준별 대미 수지 추이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7) 베리 노턴 저, 이정구, 전용복 역(2010), p. 532.

28) 중국정부는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 및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발전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태 외(2017)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끝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역시 주요한 요인이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유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 이후 법률로 고기술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해오고 있다.[29] 때문에 중국 내 수요와 상관없이 첨단제품의 대미 수입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첨단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입 비중은 2001년 16.7%에서 2016년 8.2%로 감소했다.[30]

3. 서비스 교역 현황

가. 중 · 미 간 서비스 교역

중국정부는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6,957억 달러이며, 2,39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 · 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은 장기간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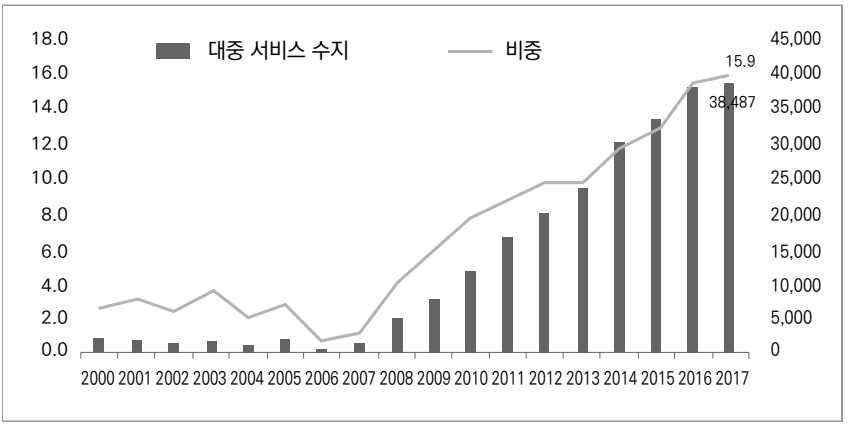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경제분석국)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은 약 131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했다. 동 기간 대중 서비스무역 흑자는 약 29배 증가하여 2017년 385억 달러(15.9%)의 흑자를 기록했다(그림 2-16 참고). 2017년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출이 많은 업종은 여행(322억 달러), 지식재산권(85억 달러), 금융서비스(4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중 서비스 수입이 많은 업종은 기타 사업서비스(법률서비스,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서비스 등, 49억 달러), 여행(47억 달러), 운수서비스(4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32]

---

29) 龙晓柏(2016).
30) 中国商务部(2017), p. 57.
31) 중국 상무부 데이터 센터, http://data.mofcom.gov.cn/fwmy/overtheyears.shtml(검색일: 2018. 4. 25).
32) BEA(검색일: 2018. 3. 21).

그림 2-16. 미국의 대중 서비스 수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EA(검색일: 2018. 3. 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 · 미 간 서비스 수지

미국은 대중 서비스 교역 중 2017년 기준 여행 수지(275억 달러)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다. 여행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 흑자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인 동시에 협력과 교류가 활발한 분야이다.[33] 그 다음으로는 지재권 사용(77억 달러), 금융서비스(3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고).

한편 미국은 여행에 이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흑자 업종인 지재권 분야에서 새로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를 지시하였다. 2017년 2월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최대 손실액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중국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34]

33) 中国商务部(2017)는 2016년 기준 과거 10년간 중 · 미 간 왕래 여행객 수는 연평균 10% 성장해왔으며, 한 해 동안 중국 여행객이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352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34)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2017), p. 4, http://ipcommission.org/report/IP

그동안 중국정부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반(反)불공정 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수정 중에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 조치」, 「유통 분야 상품품질 관리 조치」 등과 같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 처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 세관 · 국토안보 · 경찰업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권리 침해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35)]

또한 중국정부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흑자 기조를 보이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위해 2018년 4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은행업, 증권업, 보험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및 투자지분제한 철폐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 서비스 적자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야는 기타 사업서비스(법률서비스, 회계, 전문경영컨설팅, 경영관리 및 홍보서비스, R&D 등)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R&D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적자(24억 달러)를 보였으며, 전문경영 컨설팅(3억 5,000만 달러), 경영관리 컨설팅 및 홍보서비스(3억 3,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미국의 업종별 대중 서비스 수지

(단위: 백만 달러)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비스 수지	4,921	7,501	11,891	16,654	19,999	23,615	30,263	33,473	38,018	38,488
유지보수	364	481	512	533	599	650	1,026	1,128	1,211	971
교통	-540	131	161	637	791	702	863	549	543	358
여행	1,991	3,175	5,672	8,720	12,208	15,629	20,017	23,554	26,212	27,508

_Com mission_Report_Update_2017.pdf(검색일: 2018. 4. 25).

35) 中国商务部(2017), p. 54.

표 2-4. 계속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험	10	54	47	58	66	94	122	283	592	163
금융서비스	691	1,165	1,901	1,816	1,949	2,142	2,484	2,473	2,766	3,205
지재권 사용	2,164	2,074	3,242	3,959	4,413	5,495	6,301	5,658	7,415	7,656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660	-676	-803	-851	-1,088	-1,249	-370	-259	-244	-159
기타 사업 서비스	836	1,014	1,052	1,634	847	-115	-512	-379	-877	-1,539
정부서비스	66	83	108	149	215	267	331	468	398	324

자료: BEA(검색일: 2018. 3. 2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소결

글로벌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중·미 간 무역불균형은 2009년 이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품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양국간 교역구조를 가공단계와 기술수준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하는 최종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수입은 산업용 가공재료를 위주로 하는 반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생산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국간 생산네트워크와 교역 간에 높은 연관성이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교역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기술수준별 교역을 살펴본 결과 노동집약형 저기술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고기술산업의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고기술 분야에서 무역흑자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OECD TIVA 통계(2011년)에 따르면, 중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68%이며, 대미 수출

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 부가가치율이 60%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대미 수입은 중위기술 제조업 중심이며, 고기술 제조업 수입 비중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 역시 양국간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을 우려한 미국의 고기술 제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미국의 법률규제로 인해 미국의 첨단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와는 상관없이 미국 첨단제품의 수입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흑자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중국정부는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중 · 미 간 금융서비스 교역 역시 미국이 장기간 흑자를 보이는 업종이다. 업종별로 개방도에 차이가 있지만, 은행업, 증권업, 보험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 및 투자지분제한 철폐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3장 중 · 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1. 통상분쟁의 배경

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중국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중 · 미 간 통상 이슈가 확대되고 갈등관계 역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강경한 대중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중국 또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2000년부터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 · 미 간 통상분쟁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심화 ·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이전까지는 20~30%대에 머물렀으나 2009년 그 비중이 45.3%로 크게 확대되면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를 미국 내 실업 및 산업피해의 주원인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팽배해졌으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양국간 통상분쟁은 타이어 분쟁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글상자 3-1.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미국 관련 산업 및 노조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중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수입 급증으로 피해(폐업 및 실업)가 발생하였다고 제소(2009. 4. 20)

□ 이후 관련 공청회와 조사를 거쳐 USITC는 미 행정부에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2009. 9. 13)
- 이에 따라 3년간 연차적으로 부가관세를 부과: 35%(1년차) → 30%(2년차) → 25%(3년차)

자료: 정환우, 조성대, 이은미(2010), p. 4 참고.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반발한 중국은 곧 바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 통상분쟁은 철강,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확대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대중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압력과 함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강화하였다.

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및 규제조치 강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 · 중 간 통상분쟁이 재차 확대 ·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2,270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2년부터 3,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전년대비 8.1% 증가한 3,7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대중 무역적자 비중 역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40% 수준을 웃돌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대중 무역적자는 약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바, 미국이 중국에 이어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중국의 1/5 수준인 750억 달러 미만이며 그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36]

이상과 같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방침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7대 대외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7대 대외무역정책 방향 가운데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직접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② 중국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③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 제재가 그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2017. 3. 1)한 첫 번째 USTR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USTR 2017)에서 통상정책의 4대 최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시사하였다(표 3-1 참고).

표 3-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4대 최우선 과제

통상정책에 대한 국권 보호	-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자동적으로 미국 내 법의 개정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무역정책 문제에 대해 미국의 국권을 적극 수호한다는 입장 피력
미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덤핑, 보조금,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통상법을 엄격히 집행
교역상대국 시장 개방을 위한 모든 가용수단 활용	- 교역상대국 시장 개방을 통한 미국 제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활용 가능한 수단을 공세적으로 활용 -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거나 불투명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무역장벽 제거를 시사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 변화된 시대상과 시장 여건을 반영한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기체결된 무역협정의 검토 및 개선

자료: USTR(2017), pp. 2-5.

36)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data/index.html(검색일: 2018. 4. 11).

이와 같은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 의지는 2018년도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USTR 2018d)에서도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5대 통상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국가안보 수호 ② 미국경제 강화 ③ 보다 나은 통상협상 ④ 미국 통상법의 공격적 집행 ⑤ WTO 체제 개혁 등이다. 특히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자들의 적대적 정책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201조, 223조, 301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WTO 제소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37] 이러한 강경한 대중 무역제재 분위기 속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들어 이전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외에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발동을 통해 대중 불공정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 · 미 통상분쟁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에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중 무역제재 압력이 비등하였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WTO 제소, 환율절상 압력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서는 활용 빈도가 거의 없었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혁개

37) USTR(2018a).

방 이전까지는 정부가 환율 수준을 결정하는 계획환율제도를 유지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 1993년까지 이중환율제도를 실행하였다. 이중환율제도는 기존의 공식 환율과 시장수급을 반영한 조정환율이 공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식 환율과 시장조정환율 간 격차 확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중국정부는 1994년 1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환율개혁을 단행하였다.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소폭의 환율변동만을 허용하였다.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2005년 중반까지 달러당 8.27~8.28위안 사이에 고정시킴으로써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달러 페그제)를 운영하였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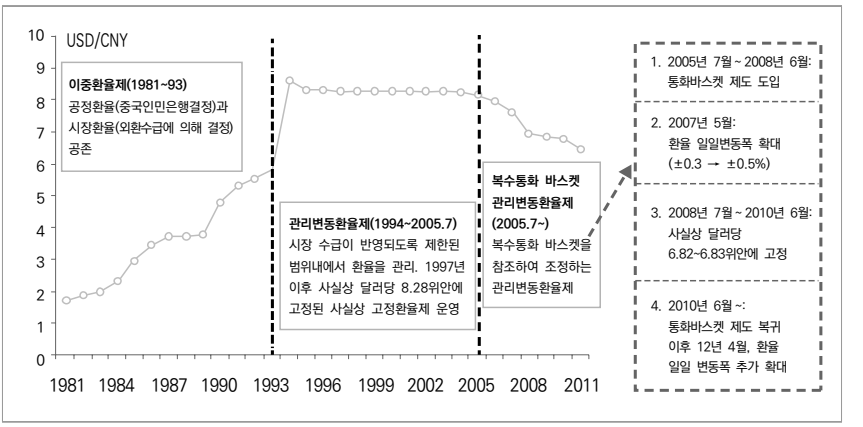
이와 같이 달러화에 페그된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 확대와 외환보유액 증가로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고조되었다. 특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정부의 환율 개입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며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중국정부는 2005년 7월 21일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8.28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하고 복수통화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달러를 비롯해 유로, 엔, 원화, 파운드, 바트, 루블화 등)을 참조하여 위안화 환율을 결정하되, 일일 변동 폭은 ±0.3%로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39]

이후 위안화 환율은 2008년 6월까지 달러당 6.83위안까지 절상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절상을 중단하고 2010년 6월까지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회귀하는 것으로 환율절상에 따른 수출급감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38) 동애영 외(2010), p. 5 참고.
39) 동애영 외(2010), pp. 5~7 참고.

규모나 비중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다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았다. 이에 결국 중국정부는 2010년 6월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하였다.[40] 이후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시장 수급을 반영한 새로운 통화바스켓 구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 3-1.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p. 1.

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논의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저평가를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

40) IMF(2013), pp. 2-3.

태다. 이와 같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경제학자와 국제기관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2000년 초반부터 위안화 저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Cline and Williamson(2007)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18개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고 이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안화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0% 저평가되었다. 특히 기간별로 볼 때 2000~04년은 17%, 2005~07년 기간은 27% 저평가됨으로써 2005년 이후 저평가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41]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위안화 저평가 정도가 보다 높아졌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표 3-2 참고). 물론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안화 저평가 정도가 10% 미만에 그친 연구도 있으나, World Bank, The Economist, Cline and Williamson(2010) 등은 위안화가 30~67%까지 저평가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미 재무부 역시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201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명확한 저평가 수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위안화는 절상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밝히며 상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42]

표 3-2. 위안화의 저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접근법	설명	저평가 정도	기준시기	연구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	WDI PPP 사용	- 50%	2008년	World Bank
절대적 구매력 평가	Big Mac 지수 사용	- 67%	2010년 1월	The Economist
절대적 구매력 평가	Penn effect 고려	+ 5%	2008년 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절대적 구매력 평가	Penn effect 고려	- 14.5% ~ - 47.5%	2005년	Subramanian (2010)
상대적 구매력 평가	1980~2009년 장기실질실효환율 평균 기준	- 7.5%	2009년 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41) Cline and Williamson(2007), p. 1.
4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3), p. 4.

표 3-2. 계속

접근법	설명	저평가 정도	기준시기	연구자
행태균형환율 (BEER)	기초경제변수로 생산성 격차와 교역기준 사용	- 2.7%	2009년 4/4분기	Goldman Sachs
기초균형환율 (FEER)	경상수지 흑자 GDP 3% 이내 기준	- 32.8%	2009년 3월	Cline and Williamson(2010)
기초균형환율 (FEER)	중국 경상수지 균형 고려	- 20% ~ -25%	2008년 말	Goldstein and Lardy(2009)

자료: 조종화 외(2010), p. 85, 재인용: 정영식, 양다영(2017), p. 7.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까지 대체로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을 전후로 위안화 저평가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Kessler and Subramanian(2014)은 2005년에는 위안화가 약 30%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었으나, 현재(2014년 기준) 위안화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과거 20여 년간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저평가에 의한 수출 중심의 발전전략이 소멸됨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3] 그동안 지속적으로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던 IMF도 2015년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IMF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후 꾸준히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10% 저평가 되었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44] 그러나 2015년 보고서부터 이러한 평가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IMF는 위안화가 펀더멘털 변화와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이며, 더 이상 저평가 환율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45] 이러한 평가의 기조는 2017년 보고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43) Kessler and Subramanian(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https://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renminbi-still-undervalued-not-according-new-ppp-estimates(검색일: 2018. 5. 8).

44) IMF 대외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s)는 28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대외포지션, 경상수지, 실질환율, 대외수지, 자본흐름, 외환보유 변화를 분석, 각국의 대외경제 부문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로 2012년부터 발간되고 있음.

45) IMF(2015), p. 13.

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취임 100일 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과거에도 미 의회는 중국의 환율조작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의 노력과 성과를 내세워 환율조작국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5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 이후 점진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확대하였다. 2009년 미 · 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개최를 계기로 수차례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약속하였고, 2015년 들어서는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바스켓 구성을 발표하였다. 즉 2015년 12월 11일 달러, 유로, 엔, 홍콩달러 등 13개 주요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지수(CFETS)를 공표하였다.[46] 2016년 12월 29일에는 통화바스켓의 구성을 13개에서 24개 통화로 확대하였다.[47] 특히 중국정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중국 위안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10.92%의 비중으로 정식 편입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48]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환율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작성을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종합무역법(1988)」과

46)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2015), http://new.chinamoney.com.cn/english/svcnrl/20151211/118(검색일: 2018. 4. 12).
47)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2016), http://new.chinamoney.com.cn/english/svcnrl/20161229/2049.html(검색일: 2018. 4. 12).
48) KIEP 북경사무소(2016), p. 3.

「2015년 무역촉진법(2016년 2월 발효)」에 근거하여 1년에 두 번(4월, 10월) 작성되는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변동을 감시하고 관찰대상국 지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 규정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① 대미 무역적자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③ 일방향의 지속적 환율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해외통화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을 제시하였다.[49] 이 중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고, 2개 항목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50]

2016년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두 가지 기준(과도한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3% 이상)을 충족한바, 미 재무부는 중국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의 리밸런싱은 물론 중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51] 2016년 10월 보고서에서는 한 가지 기준(무역흑자)에만 해당되었으나,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을 유지한다는 새 조건을 적용하여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52] 지속적인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환율절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핵심 주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환율절상 및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은 지속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환율보고서(2017년 4월)에서도 중국은 한 가지 기준(무역흑자)만을 충족하였으나 이번에도 새로운 조건을 적용시켜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 중국을 주의 깊게 감시할

4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p. 32-34.

50) 「2015년 교역촉진법」에 의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 2).
① 미국기업이 해당국에 투자 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금지 ②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④ 해당국과 협의 진행.

5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 5.

5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b), p. 1.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53] 이와 같은 미국 재무부의 대중 환율에 대한 입장은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 비중, 중국정부의 대중 수입시장 접근 제한 및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지속, 외환시장 개입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54] 2017년 10월 하반기에 이어 2018년 상반기 환율조작국 보고서(4. 13)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2017년 중 위안화 환율이 대체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국이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55]

표 3-3.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2017. 1~12)

구분	대미 무역수지 (십억 달러)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비중, %)	3년간 변화 (GDP 대비 비중, %)	규모 (억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비중, %)	순매수 규모 (억 달러)	지속적 개입 여부
중국	**375**	1.4	−0.9	168	−0.6	−68	x
멕시코	**71**	−1.6	0.2	−18	−0.2	−2	x
일본	**69**	4.0	3.3	197	0.0	0	x
독일	**64**	**8.1**	0.6	299	–	–	–
이탈리아	**32**	2.8	0.9	54	–	–	–
인도	**23**	−1.5	−0.2	−39	**2.2**	56	**o**
한국	**23**	**5.1**	−0.9	78	0.6	9	o
캐나다	18	−3.0	−0.6	−49	0.0	0	x
프랑스	15	−0.6	0.4	−15	–	–	–
대만	17	**14.6**	3.1	84	1.3	7	o
스위스	14	**9.8**	1.4	67	**6.6**	45	**o**
영국	−3	−4.1	1.3	−107	0.0	0	x
브라질	−8	−0.5	3.8	−9	0.1	2	x
유로 지역	133	3.5	1.0	440	0.0	0	x

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진한 글씨체로 표시.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p. 27.

53)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 과도한 비중을 가진 국가는 모니터링 국가에 포함,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중국을 지속적으로 감시국가에 지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함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a), p. 2).
5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b), p. 3.
5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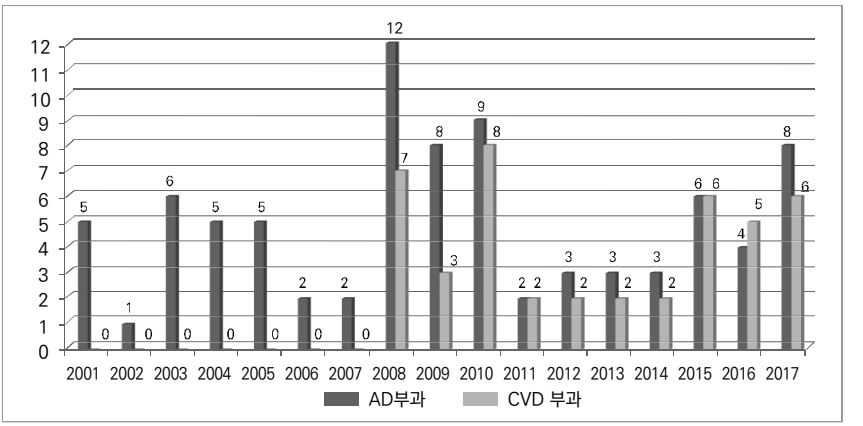
3. 미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 중 간 통상분쟁을 겪으면서 양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수단은 반덤핑 · 상계 관세를 비롯한 무역구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조치는 200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다. 특히 1984년 이후 비시장경제국가에는 사용하지 않던 상계관세조치를 2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인쇄용지에 적용하면서 대중 상계관세조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구제조치 강화의 계기로 작용한바, 2008년부터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부과조치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2.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추이

(단위: 건수)



자료: USITC(2018), DB(검색일: 2018. 4.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0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미국의 대중 무역구제조치 빈도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차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총 84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바, 이는 여전히 무역구제조치가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3월 12일 기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159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총 부과 건수(431건) 중 37%를 차지하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구제조치 부과 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에 이어 인도 32건, 한국 30건, 대만 24건, 일본 19건 순으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48건(31%)으로 최대 규제 대상이며 그 다음으로 화학 · 의약품(36건), 금속 · 광물(10건) 순이다.

표 3-4.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품목별 분포(2018. 3. 12. 기준)

(단위: 건)

	농산물	화학/의약	철강	금속/광물	기타	고무/플라스틱	섬유/의류	기계/전자	합계
전체	28	53	223	25	68	23	5	3	431
중국	7	36	49	10	43	8	4	2	159
(CVD)	(1)	(8)	(19)	(1)	(11)	(4)	(2)	(1)	(47)

자료: USITC(2018), DB(검색일: 2018. 4. 1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미 상무부가 1991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2017년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한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사를 직권으로 자체 발동하였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해당 수입품 업계의 조사 청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미 상무부 역시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자체 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전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상무부 직권에 따른 자체 조사를 벌인 사례는 1991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마지막이다.[56] 미 상무부 직권에 따른 자체 조사는

56)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a), "U.S. Department of Commerce Self-Initiates Historic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가 드문 직권 조사를 중국에게 적용한 것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반덤핑 · 상계 관세조치 강화에 맞서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구제조치 부과 대상국이 되었다. WTO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전체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부과 건수는 102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건수는 2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미국에 이어 일본(20건), EU(19건), 한국(10건) 순이다.

나. 201조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조에 의거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solar cells and modules)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두 제품에 대한 201조 조사는 각각 2017년 6월 Whirlpool과 2017년 5월 Suniva의 201조 조사 청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조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관련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와 권고조치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57] 트럼프 행정부 이전 201조 조치가 마지막으로 취해진 것은 2002년으로 당시 부시 대통령은 철강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5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n Common Alloy Aluminum Sheet From China"(2017. 11. 28),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11/us-department-commerce-self-initiates-historic-antidumping-and(검색일: 2018. 4. 11).

57) USTR(2018b).

58) USTR(2018d), p. 16.

글상자 3-2. 1974년 통상법 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 1974년 통상법 201조는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조치(세이프가드)로서, 국내 생산업체는 USITC에 수입 급증에 따른 산업 피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USITC가 관련 조사 수행 결과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대통령은 USITC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세부과
  ○ TRQ(Tariff rate Quotas)
  ○ 수량제한

자료: USTR(2018b).

이번 201조(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은 세탁기에는 TRQ를 적용하고 태양광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120만 대 내에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20% → 18% → 16%의 관세가 적용되며 물량 초과 시 50% → 45% →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TRQ를 적용하는바, 5만 대, 7만 대, 9만 대 내에서는 무관세,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완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한편 태양광 모듈에는 할당관세 없이 4년에 걸쳐 30% → 25% → 20% →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의 할당량 내에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4년에 걸쳐 모듈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59]

이번 미국의 201조 조치는 특히 중국정부의 태양광 산업 지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와 규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태양광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특별 인센티브 및 대출, 금융지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5년 7%에 불과하던 중국산 태양광 셀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2년에는 6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태양광 모듈 역시 세계 생산의 71%를 차지하였다.[60] 이로 인

59) USTR(2018c).

해 ITC 조사 결과 태양광 제품의 수입 증가가 관련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태양광 제품 가격 급락, 재무상태 악화, 생산 중단 및 R&D 감소 등)를 입혔다는 것이 미국 측의 핵심 논리이다.[61]

다. 232조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미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의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한 것이다.[62]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미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으로 국가안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2018년 2월 16일 대통령에 보고하였다.[63]

---

60) USTR(2018b).
61) USTR(2018d), p. 17.
62) Whitehouse(2018), "President Donald J. Trump is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That Threaten to Harm Our National Securit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addressing-unfair-trade-practices-threaten-harm-national-security(검색일: 2018. 4. 11).
63)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검색일: 2018. 4. 11).

글상자 3-3.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 개요

□ 미국의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관세부과 및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32조 조사 개시는 이해관계자의 조사 신청 및 상무부 자체 발의에 의해서 가능하며, 미국 상무부는 개시 이후 270일 내에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대응조치를 제안
- 대통령은 상무부의 제안에 근거 90일 이내 조치 여부를 결정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4. 20), "Fact Sheet: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17/04/fact-sheet-section-232-investigations-effect-imports-national-security(검색일: 2018. 3. 15).

미 상무부의 232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보인다(표 3-5 참고). 특히 철강의 경우 중국의 과잉생산을 글로벌 공급과잉의 최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최대 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대상 품목이 중국산 철강인바, 이미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강경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구제 조치 이외에 이례적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점은 대중국 통상규제 의지가 그만큼 강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5. 232조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대상 제품	주요 내용
철강	·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수입국으로, 수입이 수출의 약 4배 · 2000년 이후 6개의 전로(basic oxygen furnace)와 4개 전기로(electric furnace) 폐쇄 · 월평균 중국의 철강 생산은 미국의 연간 생산량에 육박, 전기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는 미국 내 1개 생산자만이 잔존 · 1998년 이후 고용 35% 감소 · 최근 세계 전체 과잉설비는 약 7억 톤 규모(미국 연간 총 철강 수요의 약 7배)

표 3-5. 계속

대상 제품	주요 내용
철강	·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철강 과잉설비의 최대 원천 · 2018년 2월 15일 기준 미국의 철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는 169건, 이 가운데 29건이 중국산 철강 대상(25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
알루미늄	· 1차 알루미늄 전체 수요의 90%를 수입(2012년 66%) · 2013~16년 동안 알루미늄 산업의 고용 58% 감소, 6개의 용광로(smelter) 폐쇄, 잔존 5개 용광로 중 2개만이 가동 가능한 상태 · 2018년 2월 15일 기준 미국의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는 2건으로 모두 중국산임(4건 조사 진행 중)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검색일: 2018. 4. 11).

라. 301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 조치로 이어지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301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상자 3-4.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 미국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상거래(재화 및 서비스 수출)를 제한하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법률, 정책 및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에 대한 제재(대응) 조치 절차를 규정함.
- 301조에 근거하여 USTR이 관련 조사를 수행한 결과 교역 대상국의 법률, 정책, 관행이 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무역협정 양허 중지
  - ○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조치
  - ○ 서비스 관련 수수료 부과 또는 제한조치
  - ○ 대상국가와 협의: 관련 행위 중단 또는 미국에 보상혜택 제공 협상
  - ○ 서비스 부문 허가 제한 조치

자료: USTR(2018d), p. 14.

미국의 대중 301조 조치는 2017년 8월 301조 조사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으로부터 시작되는바, 중국의 기술이전 · 지재권 · 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부당한 기술이전 요구, 지재권 침해 등)이 R&D 및 첨단기술 제품에 선도적인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핵심 논거이다. 즉 이러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기업의 공정한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 무역적자 및 산업 피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USTR은 곧바로 대중 301조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조치 지시가 이어졌다.

표 3-6. 301조 조사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7. 8. 14	- 트럼프 대통령, USTR에 대중 301조 조사 지시 각서 서명
2017. 8. 18	- USTR, 중국의 기술이전·지재권·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 착수
2017. 10. 10	- 관련 공청회 개최
2018. 3. 22	- USTR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트럼프 대통령, USTR 조사 결과에 의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지시
2018. 3. 23	-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 요구 및 지재권 보호에 대해 WTO 제소
2018. 4. 3	- USTR, 301조 조사 의거 대중국 제재조치로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 발표(1,300여개 대상)

자료: USTR(2018e), pp. 3-9.

USTR은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술이전 · 지재권 · 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미국의 상무적 이익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USTR의 주장이다.

글상자 3-5. USTR의 대중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 JV 요건, 외자지분제한, 각종 행정 검열 및 승인절차 등을 통해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요구
-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
- 첨단기술, 지재권, 기술이전 취득을 위한 대미 투자 및 기업 인수에 불공정 개입 및 지원
- 영업비밀 및 정보 탈취를 위한 미국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 지원 및 개입

자료: USTR(2018e), pp. 5-6.

이와 같은 USTR의 결과 보고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첫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 부과(대통령 지시 이후 15일 이내), 둘째, WTO 제소, 셋째, 중국의 미국 중요 기술 인수를 위한 투자 제한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 요구 및 지재권 보호에 대한 WTO 제소는 바로 다음날(3. 23) 즉각 이루어졌다. 10일 뒤인 4월 3일에는 25%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가 발표되었다. 대상 품목은 모두 1,300여 개로 기계류(섬유 및 신발 제조 기계 및 기타 기계류), 우주항공 및 해양설비, 통신기술, 의료용품, 무기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USTR에 따르면 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중국 산업정책의 수혜 대상이 대거 포함되었다. 추가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연간 무역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는바,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피해액과 상응하는 수준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25% 추가관세 조치는 약 50일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 미국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조치

상기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상무부, 외교부 성명 및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

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표 3-7]에 미국의 대중 통상규제 조치별로 중국정부의 반응을 정리하였다.

표 3-7.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별 중국정부의 반응

201조 반응	232조 반응	301조 반응
- [상무부, 1. 25] 201조 조치는 무역구제의 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출; 미국의 산업은 물론 관련 제품의 글로벌 무역환경을 저해, WTO 회원국과 공조하여 대처하겠다는 의지 표출	- [상무부, 3. 5] 제재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용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 국가안보를 핑계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WTO 체제 훼손	- [상무부, 3. 24] 301조 결과 대중 규제조치는 중국의 지재권 강화 노력과 WTO 규정을 무시한 처사; 일방적 보호무역의 행태,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이를 감당할 자신감을 동시에 피력
	- [상무부, 3. 13]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견지; 미국 내(의회, 산업계) 반대의견도 있음을 강조, 미국에게 관련 조치 폐지 촉구	- [주미 대사관, 3. 23] 301조 조치는 상호 호혜관계를 무시한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응 의지를 표출, 301조는 미국은 물론 국제무역 질서와 세계경제를 위협한다고 경고
	- [상무부, 3. 23] 232조 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보복조치(미국산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발표와 함께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에게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	- [외교부, 3. 21]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해 보호를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 [Zhong Shan 상무부장관, 3. 11] 무역전쟁은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재앙이라고 경고,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표출, 양국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및 대화를 강조

표 3-7. 계속

201조 반응	232조 반응	301조 반응
		- [리커창 총리, 3. 20] 무역전쟁은 협상 및 대화라는 무역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승자가 없음. 반면 지속적인 개방 확대를 약속(수입관세 인하, 제조업 개방,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등)

자료: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검색일: 2018. 4. 20);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Statement of the Chinese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http://www.china-embassy.org/eng/zmgxss/t1544748.htm(검색일: 2018. 4.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rch 21, 2018,"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544122.shtml(검색일: 2018. 4. 20); International Trade Daily(2018. 3. 21).

이를 보면 중국정부는 우선 미국의 연이은 통상규제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미국 제재조치의 부정적인 측면(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양국간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를 약속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64]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맞대응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즉 232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실제 제재조치(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대응조치를 취했다(표 3-8 참고).

64) CF40 관계자 인터뷰(2018. 3. 14, 베이징).

표 3-8. 미국 대중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보복) 조치

조치 구분	232조 대응조치	301조 대응조치
1) 보복 관세조치	- 15%, 25%의 추가관세 부과	- 25%의 추가관세 부과
- 관세 부과 대상 품목	- 1차로 120개 품목(2017년 기준 9억 7,700만 달러 수입 규모)에 15% 관세 부과 : 신선 및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변성에탄올, 미국인삼, 무계목강관 등)	- 106개 품목(2017년 기준 약 500억 달러 수입 규모)
	- 2차로 8개 품목(19억 9,200만 달러 수입 규모)에 25% 관세 부과 : 돈육 및 가공식품, 재생 알루미늄 등)	- 대두, 옥수수, 면직물, 사료, 밀, 쇠고기, 오렌지주스, 위스키, 담배,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항공기, 액화석유가스
- 조치 발효일	- 4월 2일	- 미국의 301조 대응조치 최종 확정일에 따라 조정
2) WTO 제소	- 국가안보로 위장한 미국의 232조치는 보호무역조치이며, 일부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WTO 및 세이프가드 규정의 비차별적, 양허관세 원칙을 위배, 이를 WTO에 제소(4. 5)	- 미국의 301조에 따른 조치는 WTO의 기본적인 규정(비차별적, 양허관세)을 위배, 이를 제소(4. 4)

자료: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 (검색일: 2018. 4. 20).

특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의 중국산 제품(500억 달러 수입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입 규모의 미국산 제품 106개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조치로 대응하였다. 이는 미국의 통상제재조치를 좌시하지 않고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4월 4일과 5일 연달아 미국의 232조치 및 301조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는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조치 및 보호무역주의의 위법성 ·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다른 피해국가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6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에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제재조치 실행에 대해서는 자국 이익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맞대응 조치를 병행할 것이다.[66] 향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강도,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망하면서 대응조치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평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슈별로 미 · 중 통상분쟁의 전개과정을 미국의 통상제재 및 중국의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중 · 미 통상분쟁의 주요 내용은 [표 3-9]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8년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은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집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중 통상제재조치를 활발하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양국간 환율조작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상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발표한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3개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3가지 기준 중 2개를 충족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격화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위

65) 중국 경제무역대학교 관계자 인터뷰(2018. 3. 15, 베이징).
66) 중국 CASS 미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3. 15, 베이징).

안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의혹이 여전하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도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9.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슈별 통상분쟁

	위안화 환율조작	201조	232조	301조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	- 2017년 4월~2018년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한 가지 기준만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적자국이라는 조건을 적용 -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한 환율조작국 지정 시사	- 2018년 1월 22일, 세탁기,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TQR 및 관세 부과 - 특히 중국정부의 태양광 산업 지원에 주목(미국 태양광 산업 피해의 주원인으로 지목)	- 2018년 3월 8일,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 -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글로벌 과잉생산의 최대 원인(미국 산업에 피해)	- 2018년 3월 22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기술이전, 지재권, 혁신 관련)에 대한 제재 지시 - 2018년 4월 3일, 대중국 제재조치로 중국산 1,300개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
중국의 반응 및 대응 조치	-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의 성과와 노력을 부각 - 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 위안화 통화바스켓 개선	- 201조는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이라고 비난(2018. 1. 25)	- 미국산 128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15%, 25%의 추가관세 부과(2018. 4. 2) - WTO 제소(2018. 4. 5)	- 미국산 106개 품목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 - WTO 제소(2018. 4. 4)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절상이 대중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율보고서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내수 진작, 대미 수입 확대를 촉구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단순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제재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현재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기 전까지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재차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환율압박에 대한 의지도 여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제재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이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을 충족시킨 상태에서도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과도한 적자국이라는 명분이 작용하였다. 이는 향후에도 중국을 겨냥해 얼마든지 환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보고서부터 「2015년 무역촉진법」은 물론 「종합무역법(1988)」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했을 때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요구하는 환율조작국의 기준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보다 모호한 「종합무역법」으로도 얼마든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미국의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대중 견제와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간 관세 부과 대응조치 중심의 무역 분쟁이 보다 격화될 경우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대중 통상규제조치의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의지와 조치 실행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중국 역시 적극적인 맞대응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어 당분간 양국간 통상갈등은 단기에 심화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 · 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은 미국의 대중 제재조치의 강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사전 합의, 통상분쟁 심화 속 합의, 전면적 무역전쟁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양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301조에 따른 대중 관세 부과조치가 최종 발효되기 이전에 사전 합의에 도달

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및 분쟁 해소를 위한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즉각 수용하고, 개혁개방의 급속한 추진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중국이 추가적인 대미 수입 확대 및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강화를 즉각 실행하는 한편, 금융 ·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대체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수용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므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시나리오는 사전 합의에 실패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이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조치 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최종 발표에 대응한 25%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세워둔 상태이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분쟁 심화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노력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미 · 중 포괄적경제대화를 비롯한 대화채널 가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나리오는 양국간 통상분쟁 심화가 지속되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즉 미국 통상법에 의거한 대중 통상제재와 중국의 보복 관세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데 이어 환율조작, 투자제한조치 등으로 통상분쟁이 전면 확대 심화되는 것이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 측의 요구가 관세 부과 중심의 대중 통상제재조치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제2플라자 합의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 특히 미국은 「종합무역법」을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 전반적인 중국의 대미 투자 · 기업 인수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강화에 대해 중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기업의 대중 진출 제한 강화,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 국채의 매각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67]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와 대응은 미국은 물론 중국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중 · 미 통상분쟁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성격	-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전 합의 도출	- 통상분쟁 심화와 대화 채널 가동 혼재	- 통상분쟁의 전면적 심화 확대
미국의 가능 조치	- 무역불균형 및 통상마찰 해소를 촉구 -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및 시장개방 요구	- 25% 추가관세 부과조치 실행, WTO 제소 - 대중 불공정무역관행 제재 조치 지속 - 대화채널 가동	- 환율조작국 지정, 제2 플라자 합의 요구 -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강화
중국의 가능 조치	- 대미 수입 및 시장개방 확대 - 환율시스템 시장개혁, 개방 속도 가속화	- 25% 추가관세 부과조치 맞대응, WTO 맞제소 - 대화채널 가동	- 미국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반독점 조사 강화 - 미국채 매각
실현 가능성 정도	낮음	중간	희박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67) 중국 CAITEC 미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3. 14, 베이징).

제4장 중 · 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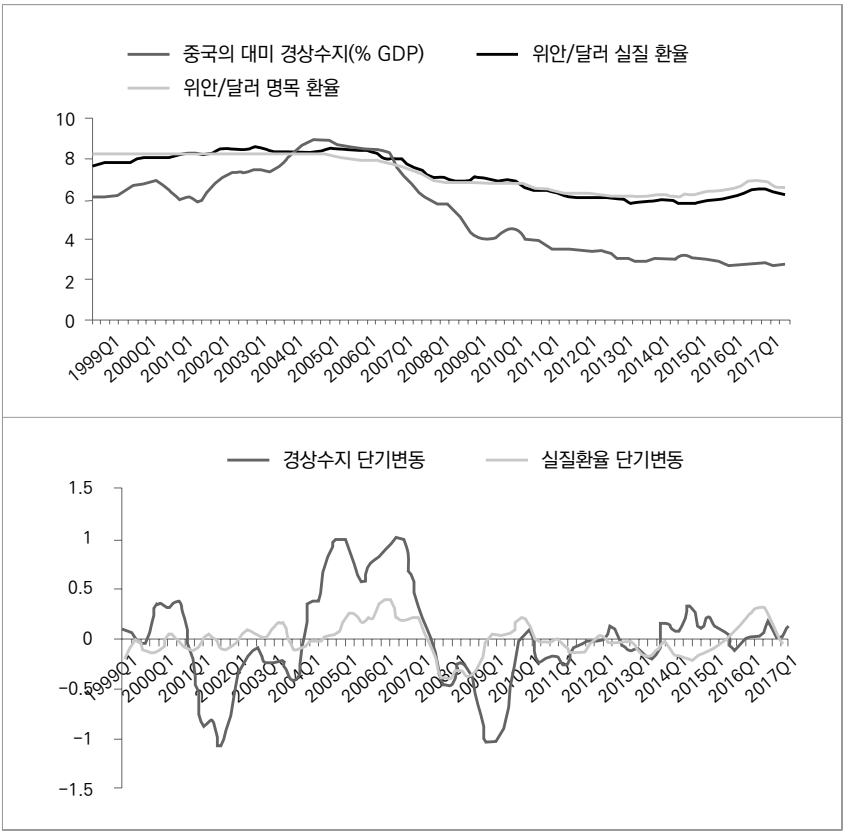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미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압력이 지속되면서 환율 조정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논제로 부상하였다. [그림 4-1]은 1999년 1/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 중국의 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비율과 위안/US달러의 명목 및 실질환율 추이를 보여준다. 명목환율이 외화의 수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외화의 가격인 반면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양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율로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환율은 실질환율이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명목환율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2005년 2/4분기까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중국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실질환율은 오히려 절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2005년 7월 이후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면서 실질환율이 2015년 1/4분기까지 약 32% 절상되었다. 중국 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1/4분기에 GDP 대비 9%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는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는 시기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확대되고 절상되는 시기에 불균형이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는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단기변동[68] 추세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혼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68) 단기변동은 hpfilter를 이용하여 추정한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난 편차(deviation)를 가리킴.

분석하였다. 첫째,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환율조정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요인이었는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기간 동안 중국은 환율제도를 개혁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환율제도의 개혁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기여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와 실질환율



주: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중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의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고, 위안/달러 실질환율은 양국의 상대물가와 명목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2) 경상수지 단기변동과 실질환율 단기변동은 hpfilter를 이용한 장기 추세를 제거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BEA(검색일: 2018. 4. 15); CEIC(검색일: 2018. 2. 13); IFS(검색일: 2018. 2. 1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조정되어왔다. 한 나라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대와 조정은 여러 가지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면서 세계무역체제에 통합되었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되면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했다. 반면 미국은 재정적자의 확대, 민간저축률의 하락 등의 내부적인 불균형과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대, 신흥국과의 산업구조 및 발전 단계의 차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의 내수부진,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중국의 내수 위주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조정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양국간의 경상수지 불균형(bilateral current account imbalance)이 각 국가의 경상수지 불균형(overall current account imbalanc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이 중 · 미 간 경상수지의 확대와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국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환율 관련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실질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중 · 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 · 단기적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Chinn and Prasad(2003)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 · 장기적으로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 외에 실질환율을 고려한다. 결정요인의 장 ·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triangle Y_t = A(L)\triangle Y_{t-1} + \Pi Y_{t-1} + \epsilon_t \qquad [식\ 4\text{-}1]$$

여기에서 A(L)은 과거 시차변수의 계수를 나타내는 시차연산자(lag operator)의 다항식 행렬이고 ΠY_{t-1}은 공적분 관계를 반영하는 오차수정항이다. Y_t는 GDP 대비 중·미 경상수지,[69] 양국의 GDP 대비 정부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GDP 대비 순 해외자산의 크기, 중국의 금융 심화 정도,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의 개방도, 실질환율을 포함하는 벡터이다.

금융 심화 정도의 대용변수로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자본계정의 개방도는 실질적인(de facto) 자본 개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역개방도와 유사하게 GDP 대비 해외자산과 부채의 합을 사용하였다.[70] 실질환율은 위안/달러 명목환율에 양국 물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실질환율의 상승은 위안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교역조건은 양국의 수출 디플레이터/수입 디플레이터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즉 교역조건의 상승은 중국 교역조건의 상대적인 개선으로 해석된다.

사용된 데이터는 분기별 데이터이며 분석기간은 1999년 1/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이다. 양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의 차이는 음(-)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동평균(moving-average) 방법을 이용하여 계절 조정을 하였고, 그 외의 모든 변수는 Census X-13 방법으로 계절 조정을 하였다.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변수는 명목변수간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실질성장률은 명목

69) 양국간의 경상수지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아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0) 제도적인 자본계정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Chinn-Ito 지수는 분석기간(1999~2017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GDP를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 GDP로 나타낸 후 로그차분을 하여 계산하였다. 사용한 변수의 출처와 가공 방식은 [표 4-1]에 정리하였다.

표 4-1. 변수의 출처와 설명

변수명	설명	출처
GDP 대비 중·미 경상수지	미국의 대중 상품 및 서비스 수지/중국 GDP	BEA, CEIC
양국의 GDP 대비 정부재정수지의 차이	중국 재정수지/GDP-미국 재정수지/GDP	CEIC
중국의 GDP 대비 순 해외자산의 크기	중국 순해외자산/GDP	CEIC
중국의 금융 심화	중국 민간신용/GDP	CEIC
양국 실질 GDP의 성장률 차이	⊿ln(중국의 명목GDP/CPI)-⊿ln(미국의 명목GDP/CPI)	CEIC, IFS
교역조건	중국 수출 deflator/수입deflator- 미국 수출 deflator/수입 deflator	Oxford Economics
무역개방도	미국의 대중 수입+대중수출/중국의 GDP	BEA, CEIC
자본계정의 개방도	중국의 해외자산+해외부채/GDP	CEIC
실질환율	위안/달러 명목환율*미국 CPI/중국 CPI	CEIC, IFS

자료: 데이터 출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변수들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2]에서 보듯이 양국의 실질성장률 차이, 재정수지 차이, GDP 대비 순해외자산, 실질환율에 대해서는 ADF검정과 PP검정의 결과가 다소 상충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준 값에 대해서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1차 차분 값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단위근 검정 결과

	수준값		1차 차분값	
	ADF	PP	ADF	PP
중·미 경상수지	-0.5580	-0.3861	-5.0312	-5.1050
	(0.8727)	(0.9054)	(0.0001)	(0.0001)
실질 GDP 성장률 차이	-2.0279	-6.7715	-12.7450	-31.4377
	(0.2745)	(0.0000)	(0.0001)	(0.0001)
GDP 대비 재정수지의 차이	-1.3414	-4.1984	-13.7812	-15.4601
	(0.6060)	(0.0013)	(0.0001)	(0.0001)
중국의 GDP 대비 순해외자산	-1.8646	-1.6099	-2.1463	-3.3936
	(0.3471)	(0.4726)	(0.2276)	(0.0142)
중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0.4289	-0.1276	-5.4133	-5.3911
	(0.8980)	(0.9419)	(0.0000)	(0.0000)
교역조건	-2.4859	-2.5429	-11.6664	-11.4218
	(0.1229)	(0.1096)	(0.0001)	(0.0001)
무역개방도	-1.4721	-1.3682	-5.6488	-5.6427
	(0.5423)	(0.5935)	(0.0000)	(0.0000)
자본계정개방도	-2.1205	-2.1433	-8.6125	-8.6791
	(0.2374)	(0.2287)	(0.0000)	(0.0000)
실질환율	-0.7863	-0.3826	-2.0631)	-5.9064
	(0.8171)	(0.9061)	(0.2600)	(0.0000)

주: 1)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함.
2) ( ) 안의 숫자는 p-value를 나타냄.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 벡터의 개수	Trace 통계량		Max-Eigen 통계량	
	검정통계량	p-value	검정통계량	p-value
0	315.4832	0.0000	75.9594	0.0013
≤1	239.5238	0.0000	59.2319	0.0209
≤2	180.1808	0.0000	48.8391	0.0597
≤3	131.3417	0.0005	43.9492	0.0437
≤4	98.3925	0.0108	35.2840	0.0810
≤5	52.1084	0.0919	23.5049	0.2987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3]은 변수들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한센 공적분 검정을 한 결과이다. Trace 통계량에 의하면 5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며, Max-Eigen 통계량에 의하면 2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수지와 고려된 거시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실증분석 결과

[표 4-4]는 경상수지와 거시변수의 공적분 벡터 추정치와 경상수지의 단기 변동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우선 공적분 벡터는 경상수지와 거시변수들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나타낸다.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는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구매력으로 연결되어 중국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상수지는 국민소득항등식에 의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에서 투자를 차감한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될 경우 경상수지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수지와 미국의 재정수지의 차이에 대한 계수가 음(-)의 값으로 미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미국의 경상적자가 더 커짐을 의미하여 이론적 예상과 같은 부호가 나왔다. 중 · 미 간의 경상수지가 양국의 총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중국의 순해외자산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Chinn and Prasad(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국 금융 심화의 대용변수인 GDP 대비 민간신용은 유의하게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금융산업의 발전은 소비평탄화에 기여하여 중국과 같이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미래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현재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입소비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조건과 자본계정의 개방도는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양국간의 무역이 개방될수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질환율은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로 추정되어 일반적 경제학 이론과 부합한다. 즉 위안화가 달러 대비 실질절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상수지의 변동은 이전 기 경상수지의 변동과 무역개방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의 경상수지는 지속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기적인 경상수지의 변동은 시차변수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무역량이 증대될수록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수정항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를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4.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71]

변수	표준화된 공적분벡터	1차 차분값의 시차변수
오차수정항		0.0028
		(0.0778)
경상수지	1.000	0.3121
	-	(2.6619)
실질 GDP 성장률 차이	0.5905	0.0098
	(5.7010)	(0.5560)
GDP 대비 재정수지 차이	0.1836	-0.0046
	(4.2131)	(-0.5416)
중국의 GDP 대비 순해외자산	-2.3620	-0.2211
	(-3.0592)	(-0.3034)
중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0.0115	0.0013
	(4.3937)	(0.3988)
교역조건	1.1818	-1.3267
	(0.4637)	(-0.9766)

71) 1차 차분값의 시차길이는 SIC(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기준으로 1분기의 시차항을 포함하였다.

표 4-4 계속

변수	표준화된 공적분벡터	1차 차분값의 시차변수
무역개방도	-6.7080	4.4661
	(-2.5319)	(2.7220)
자본계정개방도	2.1427	-0.4902
	(0.7632)	(-0.4566)
실질환율	-2.2672	0.1308
	(-7.5666)	(0.4802)

주: ( ) 안의 숫자는 t-value를 나타냄.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5]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의 분산분해(variance-decomposition)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수지의 예측오차가 다른 변수들에 오는 충격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추정한 축약형 모형의 결과로부터 구조적인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촐레스키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외생성 순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들이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경상수지를 가장 내생적이라고 가정하였다. 변수는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개방도, 순해외자산, 재정수지, 민간신용, 실질환율, 실질 GDP 성장률, 경상수지][72] 순으로 배치하였다.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 개방도는 대외적인 변수로 가장 외생적이라고 가정하였고, 재정수지와 민간신용은 국내 변수이나 정책적인 변수이므로 다소 외생적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우선 1분기 후의 중·미 간 경상수지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무역개방도가 5.5%, 실질 GDP 성장률이 4.91%, 실질환율이 4.9%, 중국의 금융심화가 4.79%, 교역조건이 4.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에 있어서는 실질 GDP 성장률을 제외하고 위의 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실질환율은 20분기 후 경상수지 변동의 14.87%를 설명

72) 강건성을 위하여 실질환율과 실질 GDP의 순서를 바꾸어 추정해보았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4-5. 분산분해 결과

(단위: %)

기간	ToT	OPEN	KA	NFA	GB	PC	RER	RGDP	CA
1	4.058	5.546	0.584	0.698	0.133	4.789	4.907	4.913	78.011
2	9.274	14.713	0.279	0.885	0.047	5.010	12.576	5.366	63.842
5	12.447	22.328	0.665	2.470	0.016	7.922	12.057	5.611	48.193
10	11.447	20.281	0.694	4.780	0.011	11.482	13.519	6.233	44.897
20	10.510	17.730	0.614	6.693	0.016	13.574	14.870	6.732	44.198

주: ToT(교역조건), OPEN(무역개방도), KA(자본계정 개방도), NFA(순해외자산), GB(재정수지), PC(민간신용), RER(실질환율), RGDP(실질 GDP 성장률), CA(경상수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하여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환율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그 절대적인 크기(magnitude)가 클 뿐만 아니라 지속성(persistence)이 크다는 점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73] 경상수지의 지속성이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의 조정(mean-reverting)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겪거나 통화가치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경상수지 전환(current account reversal)을 경험하였다.

Friedman(1953)[74] 이후 환율제도와 경상수지의 지속성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왔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

73) Trehan and Walsh(1991)은 시제간 접근법(intertemporal approach)에 의해 경상수지의 시계열 안정성(stationarity)이 만족되지 않으면 장기 예산제약(long-run budget constraint)을 만족하지 않아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고,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정하였다.

74) Friedman(1953)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명목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한다면 경제적 긴장(tension)이 축적되거나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경상수지가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실증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75]

본 절에서는 경상수지의 조정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상수지 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persistence) 추정

우선 중국과 미국의 경상수지의 지속성(persistence)이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변파라미터 모형(time-varying paramete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begin{aligned}
CA_t &= \phi_{0,t} + \phi_{1,t} CA_{t-1} + e_t, & e_t &\sim N(0, \sigma_e^2) \\
\phi_{0,t} &= \phi_{0,t-1} + v_{1,t}, & v_{1,t} &\sim N(0, \sigma_{v_1}^2) \\
\phi_{1,t} &= \phi_{1,t-1} + v_{2,t}, & v_{2,t} &\sim N(0, \sigma_{v_2}^2)
\end{aligned}
\qquad \text{[식 4-2]}
$$

여기서 CA_t는 t기 중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의 GDP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모형의 절편과 자기상관계수가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시변파라미터는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 process)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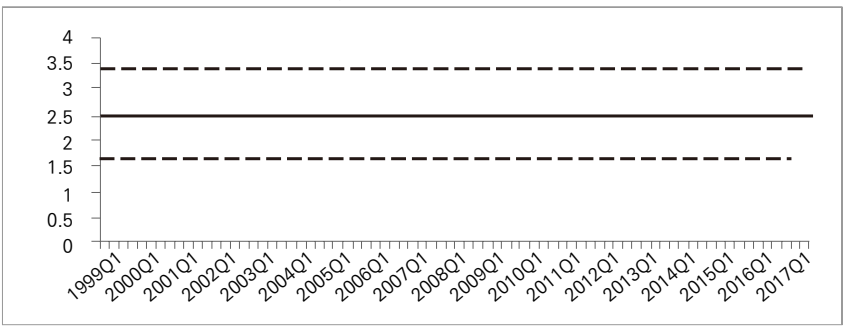
[그림 4-2]는 시변파라미터의 추정 결과이다. 2000년대 중 · 미 간 경상수지의 동태적 추이는 주로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phi_{1,t}$의 변화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분기 조건부 평균을 나타내는 $\phi_{0,t}$는 2.49로 일정한 것에 반해 지속성 계수인 $\phi_{1,t}$의 추정치는 2000년대 초반에 0.6~0.7 주위로 횡보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4/4분기 추정치는

75) Chinn and Wei(2013)은 변동환율제도가 경상수지를 빠르게 조정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단순한 신념(faith)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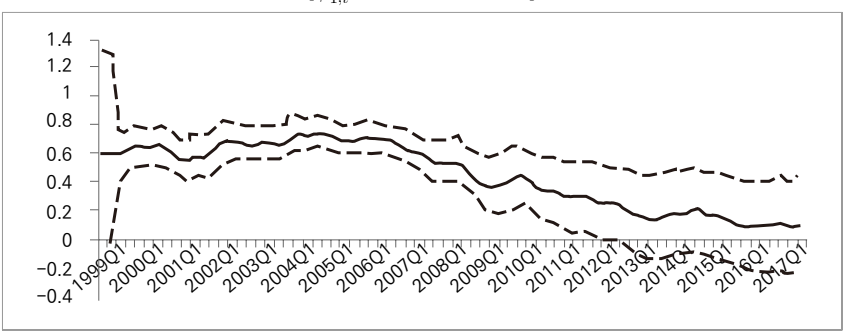
0.0997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성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중 · 미 간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정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2. 시변파라미터 추정치

[$\phi_{0,t}$의 시간에 따른 추이]



[$\phi_{1,t}$의 시간에 따른 추이]



주: 가운데 실선은 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과 환율제도의 관계

앞에서 추정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성 감소와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하였다.

$$\phi_{1,t} = X_t^{'}\beta + \delta ER_t + u_t \qquad \text{[식 4-3]}$$

$\phi_{1,t}$는 양국간의 경상수지 지속성계수이고, ER_t은 t기의 실질적(de facto) 환율제도를 나타낸다. X_t에는 Chinn and Wei(2013)에서 고려하고 있는 무역개방도, 자본개방도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를 추가하였다.

실질적 환율제도는 Ilzetzki, Reinhart and Rogoff(IRR, 2017)의 분류를 이용하였다. IRR(2017)은 각국의 실질적인(de facto) 환율변동성을 이용하여 15가지 단계로 환율제도를 분류하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환율의 변동을 자유롭게 허용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실질적 환율제도는 1994년 이중환율을 통합한 이후 2005년 8월,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76] 무역개방도는 앞에서와 같이 GDP 대비 수출입의 합으로 계산하였고 자본개방도는 GDP 대비 해외자산과 부채의 합으로 대리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는 2008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이전은 0, 이후는 1의 값을 갖는다.

[식 4-3]의 추정 결과는 [표 4-6]에 수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어난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대용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가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분석의 주요 관심사인 IRR(2017) 환율제도 변수 또한 유의하게 경상수지의 지속성을 감소시켰다고 분석되었다. 환율제도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중 · 미 간 경상수지의 조정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양국간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경상수지의 지속성이 증대되었으며, 자본개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6) IRR(2017)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실질환율제도는 2005년 8월 페그제에서 pre-announced 크롤링 페그제(변동 폭이 1% 이하)로 바뀌었고, 2014년 12월 이후 크롤링 페그제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2016년 12월까지 존재하나, 이후 중국 환율제도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2017년까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4-6. 경상수지 지속성 변동요인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t-value
상수항	0.7587	10.2703
글로벌 금융위기 더미	-0.2730	-11.9152
환율제도	-0.0697	-6.8539
무역개방도	0.3584	2.8149
자본개방도	0.2206	1.0457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장 · 단기적 주요 요인으로서 환율의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경상수지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위안화 환율절상은 단기적으로 경상수지 변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반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안화가 절상된 것이 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의 감소 추세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심화 등의 실질환율 외 요인 또한 장기적인 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펀더멘털의 차이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단기적인 경상수지 변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역개방도로 나타났다. 이는 중 · 미 간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내수위주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GDP 대비 대미 무역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충격의 단기와 장기 영향을 분석한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에 오는 충격은 1분기 후의 경상수지 예측오차의 4.9% 정도를 설명하고 20분기 후의 경상수지 예측오차의 1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계수의 해석과 부합하는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변 파라미터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경상수지의 조정은 평균의 변화가 아닌 지속성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이 감소했다는 것은 불균형이 더 빠르게 조정됨을 의미한다. 경상수지 지속성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 외에도 중국의 실질적 환율제도의 변화, 즉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및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환율제도의 개혁을 심화한다면 양국의 경상수지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본 보고서는 중 · 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2장에서는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세계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GDP 대비 9.2%까지 확대되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GDP 대비 1.4%로 감소하였다. 반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580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중 · 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78.8%)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자본재(45.5%)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그동안 대부분 대미 흑자를 기록한 소비재 교역에서 흑자폭이 감소하고, 중간재(28.1%)에서 흑자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밖에 기술수준별로 중 · 미 간 교역을 살펴보면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중 2000년 고부가가치 산업(HT)의 수출 비중은 23.3%에 불가하였으나, 꾸준히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6년 38.6%에 달했다. 반면 동 기간에 노동집약형 저기술산업(LT)의 비중은 51.3%에서 35.7%로 감소했다. 한편 중 · 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

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 · 미 간 통상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양국간 통상분쟁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비해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불만과 외환시장 개입 의혹이 여전해 향후 통상분쟁 전개 방향에 따라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마찰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 · 상계 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 · 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 · 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 · 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대되면 이에 따

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 · 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는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산분해 결과에 의하면 환율에 오는 충격은 단기적인 경상수지 변동의 4.9% 정도를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5년) 약 1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 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속성의 감소는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전망 및 협력방향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가공단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소비재에서의 무역흑자는 감소하고 자본재와 중간재에서의 무역흑자가 확대되었다. 무역흑자가 자본재와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중 · 미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경기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중국의 중간재 ·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과 대미 수입에 있어 자

본재와 반제품의 비중이 상당하여 양국의 생산네트워크가 교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역구조가 생산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경우 환율탄력성이 작아진다.[77] 따라서 중국의 대미 흑자는 환율조정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업에서의 무역흑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저기술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고기술 제조업에서의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 이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반영한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중국정부는 2015년 제조업 발전정책인 「중국제조2025」를 제시하고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고위기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증대된다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다만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더라도 지출전환(expenditure switching)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양국간의 환율조정(bilateral exchange rate adjustment)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1985년 플라자 합의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분적 환율조정이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협력관계로 인해 한 국가의 급격한 환율조정이 파생시킬 효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 · 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은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의 축소와 민간저축의 증대가 수반된다면 경

77) Swarnali, Maximiliano, and Ruta(2017).

상수지 불균형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중진국으로의 진입에 따른 고성장의 한계를 겪으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개방 · 개혁의 심화, 공급 측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소득불균형 확대, 생산성 감소, 높은 장기실업률, 쌍둥이 적자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 양자 · 다자 간 무역협정 개정 요구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 증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중국 역시 기술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대내적인 불균형과 대외적 불균형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중 · 미 통상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한다는 미국의 의혹과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므로,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이 확대 · 심화될 경우 환율조작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환율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2017년 4월 및 10월, 2018년 4월) 발표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원화절상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2018년 보고서에서도 외환시장 개입이 증대되었으며, 중기적 경제펀더멘탈에 비해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표 5-1 참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만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중국에 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규정 변경(1개의 요건만으로 관찰대상국 지정)이나 종합무역법을 적용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종합무역법에 의거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표 5-1.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평가

국가	주 요 내 용
중국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3가지 요건 중 1개 기준 충족 -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2017년 3,750억 달러 기록(전년대비 280억 달러 증가) - 1개 기준만 충족하였으나, 과도한 대미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경제의 리밸런싱을 위해 가계 소비 확대를 위한 거시경제 개혁 촉구 - 중국 경제발전의 비시장적 요인 증대로 주요 교역대상국 및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G20 공약 준수 강조 -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및 경쟁력 목적의 환율 타게팅 자제 - 환율 및 외환보유고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한국	▲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3가지 요건 중 2개 기준 충족 - 과도한 국제수지 불균형: 2017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 대비 5.1%(6년 연속 GDP 대비 3% 수준 초과) - 2017년 대미 무역흑자 230억 달러 -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2017년 11월, 2018년 1월 외환시장 개입 증대 - 달러 대비 원화 절상 속도 완화 목적 - 중기 경제펀더멘털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환율은 저평가됨 ▲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 - 국내수요 확대 촉진 및 과도한 해외수요에 의존한 성장 탈피 강조 -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환율 개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 -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pp. 3-4.

한편 중 · 미 간 통상마찰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 및 가공무역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피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중간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바, 한국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은 약 80%에 육박한다(2017년 기준 78.9%).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통상제재 강화 →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 → 한국의 대중 중간재(기계부품, 전자부품 등)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 · 미 간 통상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한 · 중 간에도 통상마찰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한 · 중 간 통상분쟁은 반덤핑 조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상계관세 관련 통상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양국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불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상계관세조치가 확산되면서 한 · 중 간에도 보조금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화학 및 철강은 한 · 중 간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이며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된다.[78]

78) 한국무역협회(2018), pp. 3~4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는 총 15건(반덤핑 14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화학제품이 11건으로 최대규제 품목이고, 나머지는 철강, 전기전자, 섬유류 및 기타가 각각 1건임.

참고문헌

[국문자료]

나까가네 카츠지 저, 강희정, 강정구 역. 2016.『경제발전론과 현대중국』. 무역경영사.

동애영, 장보형, 김영삼, 송경희. 2010.「중국 환율제도 개혁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정보』, 제86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베리 노턴 저, 이정구, 전용복 역. 2010.『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2017.『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태, 최장호, 최혜린, 김영선, 오윤미, 이준구. 2017.『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7-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환우. 2017.『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변화와 시사점』. KOCHI 자료 17-014. KOTRA.

정환우, 조성대, 이은미. 2010.「미-중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 *TRADE FOCUS*, Vol. 9, No.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 2010.『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09. 재인용: 정영식, 양다영. 2017.「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진 빈, 이기성. 2017.「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와 환율 간 관계 분석」.『아태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18.「대한 수입규제 월간 동향(2018년 4월 4일 기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및 위안화 환율 전망」.『KB daily 지식 비타민』, 12-72호.

KIEP 북경사무소. 2016.「위안화 SDR 편입과 위안화 국제화」.『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9,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7.「미 · 중 경제협력과 통상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20, No.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문자료]

葛明, 林玲, 赵素萍. 2015.「全球生产网络背景下中美贸易失衡透析-基于附加值贸易核算法的研究」.『世界经济研究』, 2015年 第5期.

龙晓柏. 2016.「中国对华贸易摩擦的主要特征与问题」.『海外投资与出口信贷』, 2016年 第2期.

杨珺晖. 2016.「人民币汇率与中美贸易结构: 基于 HS 分类数据的实证研究」.『经济问题探索』, 2016年 第2期.

中国商务部. 2017.「关于中美经贸关系的研究报告」. (5月 25日)

[영문자료]

Baharumshah, A. Z., E. Lau, and S. Fountas. 2003. "On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deficits: evidence from four ASE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4(3), 465-487.

Bernanke, B. 2005. "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Remarks at the Sandridge Lecture. Virginia Association of Economics, Richmond, VA. (March 10)

Chen, S. W. 2011.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sustainability: Evidence from the OECD countries." *Economic Modelling*, 28(4), 1455-1464.

Chinn, M. D. and E. S. Prasad. 2003. "Medium-term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s in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expl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9(1), 47-76.

Chinn, M. D. and S. J. Wei. 2013. "A faith-based initiative meets the evidence: does a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really facilitate current account adjust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1), 168-184.

Christopoulos, D. and M. A. León-Ledesma. 2010. "Current account sustainability in the US: What did we really know about it?"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9(3), 442-459.

Cline, William R. and John Williamson. 2007. "Estimates of the Equilibrium Exchange Rate of the Renminbi: Is There a Consensus and, If Not, Why Not?"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Clower, E. and H. Ito. 2012. "The persistence of current account balances and its determinants: The implications for global rebalancing." ADBO Working Paper No. 400.

Cooper, R. N. 2006. "Living with global imbalances: A contrarian view." *Journal of Policy Modeling*, 28(6), 615-627.

Debelle, G. and H. Faruqee. 1996. "What determines the current account? A cross-sectional and panel approach." IMF Working Paper 96/58.

Friedman, Milton. 1953. "The Case for Flexible Exchange Rate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Ilzetzki, E., C. M. Reinhart. and K. S. Rogoff. 2017. "Exchange arrangements entering the 21st century: Which anchor will hold?" No. w2313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ternational Trade Daily. 2018. "Li Says China Will Keep Opening and Wants to Avoid Trade War." (March 21)

IMF. 2013.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Informational Annex.

_____. 2015. 2015 External Sector Report—Individual Economy Assessments.

Kindleberger, Charles P. 1958.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Lall, S. 2000. "Th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y Manufactured Exports, 1985-98." Oxford Development Studies, 28(3), 337-369.

Swarnali, A., A. Maximiliano. and M. Ruta. 2017. "Global value chains and the exchange rate elasticity of exports." *The BE Journal of Macroeconomics*, 17(1).

Trehan, B. and C. E. Walsh. 1991. "Testing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s: Theory and applications to US federal budget and current account deficit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3(2), 206-22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3.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6a.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6b.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7a.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7b.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_____. 2018.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USTR.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_____. 2018a. FACT SHEET The President's Trade Agenda and Annual Report.
_____. 2018b. 2018.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_____. 2018c. "President Trump Approves Relief for U.S. Washing Machine and Solar Cell Manufacturers." Press Releases. (January 22)
_____. 2018d.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_____. 2018e. Notice of Determination and Request for Public Comment Concerning Proposed Determination of Action Pursuant to Section 301: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온라인 자료]

중국 상무부 데이터 센터. http://data.mofcom.gov.cn/fwmy/overtheyears.shtml(검색일: 2018. 4. 25).
商务部网站.「中国对外贸易形势报告」. 2017年 秋季. http://zhs.mofcom.gov.cn/article/cbw/201711/20171102666142.shtml(검색일: 2018. 4. 24).
商务部网站.「中美货物贸易统计差异研究报告」. http://www.mofcom.gov.cn/aarticle/i/dxfw/nbgz/201003/20100306806806.html(검색일: 2018. 5. 9).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2015. "The Launch of RMB Index Helps to Guide Public View of RMB Exchange Rate." (December 11). http://new.chinamoney.com.cn/english/svcnrl/20151211/118.html (검색일: 2018. 4. 12).
_____. 2016. "Public Announcement of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on Adjusting Rules for Currency Baskets of CFETS RMB Indices." (December 29). http://new.chinamoney.com.cn/english/svcnrl/20161229/2049.html(검색일: 2018. 4. 12).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Statement of the Chinese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March 23). http://www.china-embassy.org/eng/zmgxss/t1544748.htm(검색일: 2018. 4. 20).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s Country Outlook Economic Monthly Forecast Update Tables_China. https://connect.ihs.com/Dashboard/IndexWithoutDefaultTaxonomies?mode=LastTextNavigation(검색일: 2018. 4. 25).

Kessler, Martin and Arvind Subramanian. 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https://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renminbi-still-undervalued-not-according-new-ppp-estimates(검색일: 2018. 5. 8).

Mathai, Koshu, Geoff Gottlieb, Gee Hee Hong, Sung Eun Jung, Jochen Schmittmann, and Jiangyan Yu. 2016. “China Changing Trade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CLMV Economi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Departmental-Papers-Policy-Papers/Issues/2016/12/31/China-s-Changing-Trade-and-the-Implications-for-the-CLMV-43679(검색일: 2018. 4. 24).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newsrelease/(검색일: 2018. 4.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rch 21, 2018.”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11_665403/t1544122.shtml(검색일: 2018. 4. 20).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7. *To the IP Commission Report 2017,* Update. http://ipcommission.org/report/IP_Commission_Report_Update_2017.pdf(검색일: 2018. 4. 25).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data/index.html(검색일: 2018. 4. 11).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7. “Fact Sheet: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April 20). http://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17/04/fact-sheet-section-232-investigations-effect-imports-national-security(검색일: 2018. 3. 15).

_____. 2018a. "U.S. Department of Commerce Self-Initiates Histori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n Common Alloy Aluminum Sheet From China." (November 28).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11/us-department-commerce-self-initiates-historic-antidumping-and(검색일: 2018. 4. 11).

_____. 2018b.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 (검색일: 2018. 4. 11).

Whitehouse. 2018. "President Donald J. Trump is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That Threaten to Harm Our National Securit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addressing-unfair-trade-practices-threaten-harm-national-security(검색일: 2018. 4. 11).

[데이터 베이스]

BEA(미국 경제분석국 통계). 중 · 미 상품 및 서비스 수지.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2018. 3. 7, 2018. 3. 21, 2018. 4. 15).

CEIC. 중국 GDP, 미국 GDP, 위안/달러 명목 환율(검색일: 2018. 2. 13),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검색일: 2018. 2. 19), 중국의 민간신용, 중국의 해외자산과 해외부채(검색일: 2018. 4. 9), 중국 재정수지, 중국의 순해외자산(검색일: 2018. 4. 11), 미국 재정수지(검색일: 2018. 4. 15), 중국의 경상수지(검색일: 2018. 4. 24).

IFS. 중국 CPI, 미국 CPI(검색일: 2018. 2. 13).

KITA. 미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18, 2018. 4. 23).

KITA. 중국 무역통계(검색일: 2018. 4. 23, 2018. 4. 24, 2018. 5. 2. 2018. 5. 3, 2018. 5. 4).

OECD TIVA.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5537(검색일: 2018. 4. 25)

Oxford Economics. 중국의 수출 · 수입 디플레이터, 미국의 수출 · 수입 디플레이터(검색일: 2018. 2. 5).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18. 2. 26, 2018. 4. 17).
USITC. 201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검색일: 2018. 4. 12).

[인터뷰 자료]

중국 경제무역대학교 관계자 인터뷰(2018. 3. 15, 베이징)
중국 CAITEC 미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3. 14, 베이징)
중국 CASS 미국연구소 관계자 인터뷰(2018. 3. 15, 베이징)
CF40 관계자 인터뷰(2018. 3. 14, 베이징)

Executive Summary

China-US Current Account Imbalance and the RMB Exchange Rate

Kotbee Shin, Suyeob Na, and Minsuk Park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S-China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disputes. This paper also empirically analyzes the short and long-term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real exchange ra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account persistence and exchange rate regime.

In Chapter two, we study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erms of trade structure. We find that China's trade surplus with the U.S. is concentrated in a few specific items, including cell phone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and monitors and projectors. Looking at the processing stage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S, China's trade surplus with the U.S. has mostly come from the final goods. In particular, the surplus in capital goods trade has begun to surpass the surplus in consumer goods trade, in 2016. We also find that the surplus in high-technology manufacture exceeds that in low-technology manufacture. Meanwhile, China has run a deficit in the service trade with the U.S. and the deficit has surg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Chapter three,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spute over the yuan exchange rate and the trade disputes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the misalignment of RMB exchange rate, we find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consistent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and analysis period. However, the U.S. Treasury Department maintains its position that the RBM should be appreciated to resolve the trade imbalance. After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hard-line trade sanctions in addition to exchange rate pressures. In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increased the number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for import goods from China by 59% year-on-year,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for the first time in 26 years, exercis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nvestigation on Chinese aluminum alloy sheets. In addition, it is considering imposing tariffs based on Articles 201, 232 and 301. In response to these U.S. sanctions, China expressed its strong condemnation through government statements and countered in the same way as the United States.

In Chapter four,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the exchange rate in two ways. First, we analyzed whether the RBM exchange rates is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urrent account 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long term, China's US current account is affected not only by the real exchange rate but also by the difference in the real GDP growth rate, the difference in the financial account balance of two countries, the financial deeping of China. In the short term, only changes in trade opennes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urrent account. The change of the real exchange rate does not seem to lead to the short-term adjustment of the current account. Second,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istence of the current account and the Chinese exchange rate regime. The results implies that current account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djusted fast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hina's exchange rate system reforms contributed to current account adjustment.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that the RMB exchange rate only affects trade balance between China and U.S. in the long term, and China seems to contribute to the adjustment of trade imbalance through the exchange rate system reform. However, considering the global value chain of China

and emerging Asian economies, it is unclear whether the RMB exchange rate adjustment alone will resolve the trade imbalance. Instead, structural rebalancing such as the U.S. fiscal deficit reduction, the increase of private savings,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in China can fundamentally solve current account imbalance. Al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yet designated as a currency manipulator, the U.S. government still suspects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the undervaluation of the RMB. It is possible that the pressure of the U.S. on RMB appreciation would direct at KRW exchange rat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dependence of intermediate goods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deepening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S. may cause China to shrink its exports to the U.S., resulting in a slowdown in Korea's intermediate exports to China.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protectionism, there will be a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including the subsidy problem between Korea and China due to Korea's continuous surplus with China.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8년

18-01 호주 · 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라미령 · 신민금 · 신민이

18-02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 최장호 · 최유정

18-03 중 · 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 신꽃비 · 나수엽 · 박민숙

■ 2017년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 CHOI Bo-Young and LEE Seo Young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 김상겸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최보영 · 조문희 · 정민철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 임수호 · 김준영 · 박종상 · 안국산 · 박일봉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과 시사점 / 오윤아 · 신민이 · 김미림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 YANG Hyoeun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합을 중심으로 / 엄준현

17-08 RCEP 역내 생산 ·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라미령

17-09 13·5 규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 이현태 · 이상훈 · 김준영 · 윤규섭

17-10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 나승권 · 김은미 · 최은혜

17-11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 문진영 · 김은미 · 최은혜

17-12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 이상훈 · 김주혜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6년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16-02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 곽성일 · 이재호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 · 손성현 · 권가원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새별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 · 강부균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 · 김준영 · 홍석기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 · 김준영 · 이보람 · 张慧智 · 朴英爱 · 王箫轲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김종덕 · 최보영 · 엄준현 · 정민철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 · 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관행 변화 분석 / 이정균 · 김준영 · 임소정 · 안국산 · 미무라 미쓰히로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 오종혁 · 박진희 · 김홍원

■ 2015년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 · 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 · 최유정 · 홍석기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신꽃비(申꽃비)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bshin@kiep.go.kr)

저서 및 논문

Essays on Macroeconometrics(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5)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 to China"(공저, 2016) 외

나수엽(羅秀燁)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syna@kiep.go.kr)

저서 및 논문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공저, 2016)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7) 외

박민숙(朴敏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s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공저, 2012)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공저, 2012)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18-03



China-US Current Account Imbalance and the RMB Exchange Rate

Kotbee Shin, Suyeob Na, and Min Suk Park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고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9 788932 224510 94320

ISBN 978-89-322-2451-0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